

---

완전히

함께 만드는 새로운 경남

민선7기 2주년 도정4개년계획 점검보고서

---

2020. 06.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 1부. 민선7기 2년 도정 환경 동향과 점검 및 전망

1. 도정운영과 관련한 환경적 동향 ..... 5
2. 도정4개년계획 이행 점검보고서 작성 경과 ..... 13
3. 김경수 도정 2년의 평가 및 새로운 도전과 과제 ..... 15

## 2부. 목표 및 전략별 점검

1. 다시 뛰는 경남 경제 ..... 19
2. 사람 중심 경남 복지 ..... 40
3. 함께 여는 혁신 도정 ..... 58

## 3부. 6대 중점과제 점검

1. 경제혁신 재원 1조원 조성 및 제조업 르네상스 ..... 67
2. 사회적 가치 기반의 사회·행정혁신 시스템 구축과 운영 ..... 70
3. 서부경남 KTX 신성장 경제권 구축 ..... 72
4. R&D 체계혁신으로 사업화 촉진 ..... 74
5.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으로 먹거리 공공성 강화 ..... 76
6. 저출생 총력대응 및 공공의료 기반 구축 ..... 79

## 4부. 참고사항

1. 과제별 전담부서 및 협력부서 현황 ..... 85
2. 2020년 도정 운영방향 ..... 88
3. 신규제안과제 반영 현황 ..... 90
4. 도정자문위원회 신규제안과제(2020. 6월) ..... 94
5. 도정자문위원회 운영 ..... 95



제1부

민선7기 2년 도정 환경  
동향과 점검 및 전망



## 1 도정운영과 관련한 환경적 동향

### ■ 정치적·행정적 동향

#### ● 코로나19 국면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 2020년 연초에 김경수 도지사는 청년특별도, 교육인재특별도,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 등 3대 핵심과제와 혁신과 성장, 체감하는 변화 등 2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87개 과제를 제시함. 이는 2018년 7월 1일 출범할 때 선언한 “(도민과)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에서 2% 부족했던 정책의 보완이자 시즌2에 대한 방향타였음.
-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한국사회에는 코로나19라는 쓰나미가 강타하였음. 도지사를 비롯하여 전 공무원의 피나는 노력으로 경상남도는 2020년 6월 26일 현재 코로나19로 의심되어 검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42,292명이고 확진자는 129명인데 123명이 완치 되었고 6명이 치료 중이나 사망자는 1명도 없음. 이는 중앙정부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준비한 노력이 반영된 것임. 경상남도는 2019년 7월 1일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출범시켜서 이런 재난에 대해 미리 대비해 왔음.
- 또한 김경수 도지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 3월 8일 정치인 가운데 가장 먼저 재난 지원금(초기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여 타 자치단체의 동참, 나아가 정부의 전향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음. 이는 결국 얼어붙은 소비를 푸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고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졌음. 소상공인 카드 매출을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4월 셋째 주(20~26일)부터 90%대로 진입한 뒤 5월 둘째 주(11~17일)에 106%, 5월 셋째 주(18~24일) 114%, 5월 넷째 주(25~31일) 113%로 나타났음. (재난지원금 지급 전에는 전년 동월 대비 80% 수준이었음)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어 속된 말로 ‘코로나19로 죽는 거나 굶어 죽는 거나 한 가지’라는 국면에서 경남은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없고 경제 회복도 이루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으로 평가됨.



#### ● 21대 총선 결과

- 4월 13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래가 없는 압승을 했음. 이는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 등도 있으나 코로나19 사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WHO를 비롯하여 유럽, 미국 등 많은 국가와 언론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잘 대응했다는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영남권에서는 지난 20대 총선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2명 줄었음(9→7). 경남의 경우 2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명, 정의당 1명이었으나 21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명이 당선되었음. 영남 전체에서는 줄었으나 경남에서는 큰 변화가 없음.
- 이러한 선거결과는 김경수 도지사의 도정운영에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공약 사업인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강화하는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추진했던 사회적 가치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도 박광온 의원이 다시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접수함.

## ■ 경제적 동향

### ● 전반적인 경기 현황과 전망

- (세계)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선포된 가운데 2020년 상반기 세계경제는 2차대전 이후 최악의 위기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음.
- 빠른 속도로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에 각국이 강력한 봉쇄조치 등으로 맞서면서, 세계경제가 크게 위축되었으며 향후에도 코로나19의 전개상황 및 그에 대한 각국의 대응방식에 따라 세계경제의 향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여러 경제전망 기관들은 올초의 전망치를 빠르게 하향조정하면서 향후 코로나19의 전개 시나리오 별로 복수의 전망치를 내놓고 있음.

〈표 1〉 주요 기관의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단위: %) (자료: 각 기관)

기관명	전망시점	세계경제		한국경제		
		2020	2021	2020	2021	
IMF	2020.01	3.3	3.4	2.2	2.7	
	2020.04	-3.0	5.8	-1.2	3.4	
OECD	2020.03	2.4	3.3	2.0	2.3	
	2020.06	(대유행 1회 가정)	-6.0	5.2	-1.2	3.1
		(대유행 2회 가정)	-7.6	2.8	-2.5	1.4
세계은행(WB)	2020.01	2.5	2.6	-	-	
	2020.06	-5.2	4.2	-	-	
한국은행	2020.05	(기본 시나리오)	-3.4	4.8	-0.2	3.1
		(낙관 시나리오)	-2.5	5.9	0.5	3.8
		(비관 시나리오)	-7.1	-0.7	-1.8	1.6

- (한국) 코로나19의 충격을 비교적 일찍 겪어 상반기 경제가 다소 위축되었으나(1분기 국내총생산 전기대비 1.3% 감소), 강도 높은 방역을 통해 충격 확산을 효과적으로 제어함으로써 하반기엔 부진했던 민간소비와 상품수출의 점진적 개선을 기대할 수도 있으나 대내외적으로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음.
-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접촉 기피와 해외 주요국의 봉쇄조치 등의 결과 민간소비와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성장세를 제약했음.



- 투자는 지난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의 결과, 그리고 반도체 관련 기계류 투자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경남) 2013년 이후 주력업종 침체로 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수출입이 두루 영향을 받고 있음.

-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해 같은 분기에 대비해 광공업생산은 보합, 서비스업생산, 소매판매 및 수입은 감소 전환, 건설수주는 증가세 지속, 수출은 증가 전환, 소비자물가는 상승 전환, 고용률은 보합, 실업률은 하락 전환 등으로 나타나며, 인구의 순유출이 두드러짐(<표 2> 참조).
- 코로나19의 충격은 3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국내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에 더해 해외의 생산과 소비·투자 감소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으로 여겨짐.

<표 2> 경남의 주요 경제지표(분기별, 자료: 통계청, 5월 20일)

[전년동분기비, %, %p, 명]

주요지표	2018 2/4	2018 3/4	2018 4/4	2019 1/4	2019 2/4	2019 3/4	2019 4/4	2020 1/4
광공업생산지수*	-7.6	-5.3	2.4	-1.2	3.9	-1.1	1.0	0.0
서비스업생산지수*	1.0	0.2	2.3	0.7	0.7	-0.1	0.8	-1.9
소매판매지수*	0.0	-2.3	-0.4	-2.1	0.1	1.4	4.1	-0.5
건설수주*	-58.9	-30.1	22.8	-60.3	-3.2	81.6	50.2	10.1
수출*	-54.5	-43.7	-6.6	-9.4	10.3	10.0	-15.4	4.3
수입*	15.4	10.0	22.1	-1.7	8.2	14.2	0.2	-8.8
소비자물가	1.4	1.6	1.7	0.4	0.5	-0.4	-0.2	1.0
(상품물가)	1.6	2.2	2.4	-0.1	0.5	-1.2	-0.4	1.8
(서비스물가)	1.1	1.0	1.1	0.8	0.4	0.4	0.1	0.3
고용률	0.6	1.0	0.5	0.8	-0.6	-0.7	0.1	0.0
실업률	0.0	0.1	0.3	1.0	1.4	0.7	0.0	-0.4
인구순이동(명)	-360	-1,618	-1,494	-3,806	-2,581	-2,323	-600	-5,750

\*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매판매지수, 건설수주, 수출입의 '20. 1분기 자료는 잠정치

## ● 경남 경제 부문별 현황과 전망

□ (생산) 경남의 제조업 생산은 최근 수년간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2018년 하반기부터 회복의 기미를 보였으나, 지난해 들어서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심화 및 교역 부진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코로나19의 영향까지 중첩되어 하락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음.

- 기타운송장비(조선) 제조업에서 다소간의 선전이 있었으나, 경남의 다른 주력 산업인 기계·장비(전년동기대비 1분기 -3.9%, 4월 -20.5%) 및 자동차트레일러(-6.5%, -20.1%)의 생산 감소가 두드러짐(<표 3> 참조).
- 위와 같은 배경에서 제조업 제품 출하 감소에 동반해 재고가 증가(자동차에서 36.5% 증가)하고 있으며, 역내 중소기업의 평균가동률 저하도 현저함.

〈표 3〉 경남의 제조업 생산 관련 지표(출처: 한국은행)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비중 <sup>1)</sup>	2018	2019							2020		
		연간	연간	3월	4월	1/4	2/4	3/4	4/4	1/4 <sup>p</sup>	3월 <sup>p</sup>	4월 <sup>p</sup>
경남지역 제조업생산지수	<100.0>	-6.0	1.2	-1.3	7.8	-0.5	5.3	-1.3	1.2	0.7	2.3	-12.9
(계절조정 전기대비)		..	..	(1.8)	(3.1)	(1.6)	(2.5)	(-1.7)	(-1.2)	(0.1)	(4.6)	(-6.2)
기계장비	<17.4>	0.5	-6.1	-7.5	-1.4	-8.2	-0.1	-12.8	-3.6	-3.9	-1.3	-20.5
기타운송장비	<19.6>	-19.7	39.4	43.9	74.3	35.9	54.2	39.6	30.2	12.6	3.5	-1.3
전기장비	<7.6>	-4.6	-3.5	-0.7	0.2	-5.8	-0.7	-5.1	-2.6	1.1	0.4	-14.3
금속가공제품	<13.9>	-9.3	-15.9	-30.1	-10.7	-21.6	-15.6	-16.7	-9.2	4.4	16.6	-4.8
1차 금속	<6.0>	-1.1	-2.1	-2.5	-4.6	-1.6	-2.8	-0.6	-3.0	2.5	-1.2	-6.6
자동차 및 트레일러	<12.5>	-3.6	-4.2	-1.2	1.5	1.2	-1.8	-7.0	-8.9	-6.5	3.8	-20.1
전자영상음향통신	<1.1>	10.4	-5.2	4.5	14.8	3.1	4.9	-15.7	-12.1	1.1	8.8	-14.6
전국 제조업생산지수		1.3	0.1	-2.7	0.1	-2.2	-0.6	0.5	2.4	5.4	8.0	-4.7
(계절조정 전기대비)		..	..	(1.7)	(1.7)	(-2.4)	(1.5)	(2.0)	(1.3)	(0.0)	(5.0)	(-6.4)

주 : 1) < >내는 제조업 생산지수내 업종별 가중치 비중(2015년 부가가치 기준) 자료 : 통계청

□ (수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소비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소매점 판매액을 기준으로 보면 4월에 들어 소비 감소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나며, 투자의 경우 설비투자가 하락한 데 비해 공공부문의 발주 등에 힘입어 건설투자는 증가하는 추세임.

□ (고용) 역시 코로나19의 여파로 실적이 좋지 않은데, 특히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며 그 결과 취업자 수와 실업률이 함께 떨어지고 있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고용이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숙박음식업, 사업서비스업)에서 고용 감소가 두드러지며, 종사자지위별로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임시·일용직근로자의 감소가 뚜렷함.

〈표 4〉 경남의 고용 관련 주요지표 증감(자료: 한국은행)

(전년동기대비, 천명, %)

	비중 <sup>2)</sup>	2018	2019							2020		
		연간	연간	3월	4월	1/4	2/4	3/4	4/4	1/4	3월	4월
경제활동인구 증감		26	17	46	29	49	13	-2	8	-3	-21	-44
[ 경제활동참가율 <sup>3)</sup> ]		63.3	63.7	63.9	64.0	63.3	64.2	63.6	63.5	63.1	63.2	62.5
취업자수 증감	<100>	24	3	36	8	30	-12	-15	7	3	-29	-28
[고 용 률 <sup>4)</sup> ]		61.4	61.3	61.3	61.0	60.6	61.4	61.4	61.7	60.6	60.2	60.0
농림어업	<10.2>	22	-5	-5	-5	8	-12	-10	-6	10	17	7
제조업	<22.7>	-12	-22	-31	-31	-34	-32	-15	-5	14	9	20
건설업	<5.3>	-1	-2	3	-6	2	-4	-5	-2	5	6	10
서비스업 <sup>5)</sup>	<61.8>	14	31	69	50	55	35	15	19	-26	-62	-65
(도소매·숙박음식)	<20.8>	-10	15	8	20	6	22	14	16	-11	-28	-24
(사업·개안·공공)	<32.3>	24	15	57	35	43	15	0	3	-19	-41	-48

	비중 <sup>2)</sup>	2018	2019								2020	
		연간	연간	3월	4월	1/4	2/4	3/4	4/4	1/4	3월	4월
(전가운수통산금융)	<8.7>	0	1	4	-5	6	-2	0	1	4	6	7
임금근로자	<69.5>	12	43	78	40	58	33	44	36	13	-24	-7
(상용근로자)	<49.9>	19	21	50	32	40	18	15	10	17	19	32
(임시근로자)	<15.8>	-3	27	37	19	13	27	29	41	27	-18	-24
(일용근로자)	<3.8>	-4	-5	-9	-10	6	-11	0	-15	-30	-25	-16
비임금근로자	<30.5>	11	-40	-42	-32	-28	-46	-59	-29	-10	-6	-21
(자영업자)	<25.0>	4	-28	-34	-29	-30	-38	-38	-8	3	-1	-5
(무급가족종사자)	<5.5>	8	-12	-8	-3	2	-8	-21	-21	-13	-4	-15
<b>실업자수 증감</b>		<b>2</b>	<b>14</b>	<b>9</b>	<b>20</b>	<b>19</b>	<b>25</b>	<b>13</b>	<b>0</b>	<b>-6</b>	<b>8</b>	<b>-16</b>
[실업률 <sup>6)</sup> ]		3.0	3.8	4.2	4.7	4.4	4.5	3.4	2.9	4.0	4.7	3.9
[전국 실업률]		3.8	3.8	4.3	4.4	4.5	4.1	3.3	3.1	4.2	4.2	4.2

주 : 1) 전년동월대비 원계열 증감, 기간중은 월평균

2) < >내는 전체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2019년 기준)

3)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4) 고용률 = (취업자)/(15세 이상 인구)×100

5) 한국표준산업 분류 기준으로 D, E, G~U 산업의 취업자로 합산

6)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자료 : 통계청

## ● 몇 가지 정책 제언

□ 코로나19 충격은 경제 전반에 미치고 있지만 그 분포는 상이하며, 특히 2011년 이후 누적된 정체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된 다수의 제조업 기업에 대해 충분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함.

- 경제가 정상적인 국면으로 진입한 이후 시장경쟁에서 퇴출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원리에 따라 대안을 마련하더라도, 정상적인 상태에서라면 사업 지속가능성이 있었을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파산하는 것은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용을 보호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은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에 피해가 집중된다는 점(전국 3월 기준 전월 대비 취업자 감소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82%를 차지)에 유의하는 동시에,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의 경우엔 실적보다는 신규 채용 감소 문제가 더 두드러진다는 점도 유념해 정책적 대응을 마련해야 함.

□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소득 및 소비심리 저하가 경제의 총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 제조업 생산과 민간부문의 투자(설비 및 건설)가 크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과감한 공공지출을 통해 경제의 총수요를 자극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수주된 중장기적 시계의 대형 국책사업 중에서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부분들의 조기착공을 고려할 수 있음.

- 공공 주도의 SOC 사업 등과 함께, 지자체는 소상공인이나 노동자 등 코로나19 피해 가구에 대한 소득(부분) 보장을 포함해 도내 가계를 보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득분배 악화에 유의해야 할 것임.
- 현재 제조업 부진의 주원인이 대외적 및 세계경제적 불확실성에 있는 만큼, 경남 차원에서는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중장기적 시계의 경제 체질 개선에 힘쓰는 것이 바람직함(‘구조 개혁의 골든타임’).
- 기존에 추진하던 제조업 스마트화나 수소경제 심화 등에 덧붙여, 경제의 ‘그린’화, 사회 안전망 강화, 대-중소기업 간 상생적 경제생태계 구축,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 체계 마련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는 전반적인 경제 거버넌스 개혁에도 힘써야 함(‘경남 모형’의 확립과 확산).
-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서비스업의 다양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경제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도의 전반적인 정주 매력도 향상과 도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임. 여성과 청년 노동력 활용도 제고, 그리고 제조업에서 빠져나온 신중년을 위한 업종전환 등도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도민들의 동향

### ●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도와 도정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 코로나19 국면에서 적극적인 방역과 대안 제시는 그 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를 끌어 올리고 있음. 리얼미터가 지난 3월 25~31일 사이 광역 시도별 유권자 1천 명씩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김경수 지사는 6.0%가 오른 45.1%를 기록하였음. 총선을 마친 후에 같은 조사 기관이 4월, 5월에 실시한 지지도 조사에서도 47.9%, 48.7% 등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긍정적인 신호임.
- 한편 경상남도도 지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경남도정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사의 도정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57.3%(매우 잘 하고 있다(7.0%)+잘하는 편이다(50.3%))로 나타나 부정적인 평가 29.5%(못하는 편이다(25.8%)+매우 못하고 있다(3.7%))의 두 배 정도 높았음. 같은 시기(4월)에 조사한 외부 조사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 약 10% 높은 편임
- 도지사의 도정 수행능력과 별도로 경상남도의 도정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54.1%로 부정적인 평가 29.5%보다 훨씬 높았고, 민선 7기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인식에서는 ‘경상남도가 더 변화되고 발전할 것 같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63.0%로 가장 높았고, ‘경상남도가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가 59.4%, ‘경상남도는 추진력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54.8% 등 긍정적 평가가 높은 가운데 ‘경상남도가 하는 일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에 대해서는 48.8%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이는 전반적으로 도지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올라가고 있고, 2020년 연초에 도지사가 제시한 ‘체감하는 변화’가 적합한 방향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임. 아울러 이후 보다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도정 실현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 ● 주요 현안에 대한 경남도민들의 인식

- 같은 조사에서 도민들이 도정운영에 대해 ‘평소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59.5%가 관심이 있다고 답을 하였고,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36.9%였음. 이를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상 연령층은 68% 수준이었으나, 18~29세에서는 29.1%로 낮은 관심을 보였음. 권역별<sup>1)</sup>로 보면 서부권이 64.9%가 관심 있다고 답을 하였고, 직업별로는 농/임/어업(71.8%), 블루칼라(67.3%), 자영업(64.7%)의 순으로 답하였으며, 가구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에서 64.1%로 높은 관심을 보였음.
- 구체적인 현안에서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소득변화, 방역/안전 대응, 경제위기 대응, 경제위기 극복 역점분야,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음.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 소득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 ‘줄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60.4%이었고, ‘차이가 없다’는 38.0%, 오히려 ‘늘었다’고 한 사람도 미미하지만 1.2%였음.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자는 92.8%가 줄었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이 블루칼라가 67.6%, 농/임/어업이 56.2%였음. 소득별로 보면 200만 원 이하와 200~399만 원 사이가 65.8%, 400~599만 원이 49.7%, 600만 원 이상이 46.7%로 응답하여 소득이 낮을수록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높음. 그리고, 도정평가에서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 가운데 65.7%로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 57.9%에 비해 높았음.
- 다음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서 방역/안전 대응과 경제위기 대응을 보면 먼저 방역/안전 대응은 80.9%가 긍정적으로 답을 했으나, 경제 대응에 대해서는 59.8%가 긍정적으로 답을 하여 상대적으로 낮았음. 경제위기 대응에서 직업별로 보면 학생(71.8%), 화이트칼라(60.4%)가 긍정적인 반면 자영업(53.9%), 주부(54.5%), 농/임/어업(55.5%)에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자영업에서 38.9%로 가장 높았음.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에 대한 질문(1순위, 2순위 합)에 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순위(30.0%), 1+2순위(53.1%)로 응답하여 ‘저소득층 집중지원(1순위-17.1%, 1+2순위-35.2%)’, ‘실직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1순위-14.1%, 1+2순위 30.7%)’, ‘보편적 재난 소득(1순위-14.1%, 1+2순위-26.3%)’를 크게 앞섰음.
- 한편 뜨거운 이슈였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찬반을 보면 응답자 82.4%가 찬성으로 응답하여 반대 15.9%에 비해 압도적이었음. 18~29세와 40대, 학생과 블루칼라, 도정 운영 긍정 평가층, 도지사 업무 수행 긍정 평가층에서 상대적으로 찬성이 높았고 50대, 부정 평가층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음.

1) 서북부권 : 거창, 함양, 산청, 함천 / 서부권 : 진주, 사천, 하동, 남해 / 동북부권 : 김해, 양산, 밀양, 창녕, 의령 / 동부권 : 창원, 거제, 통영, 고성, 함안

- 기대되는 경상남도의 추진사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이 34.5%,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특별도 조성’이 32.1%,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특별도 추진’이 30.7%, ‘스마트산단 추진으로 제조혁신 기반 조성’이 30.1%로 응답했음(1순위, 2순위 합계).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할 것은 각 사업에 대해 연령별, 권역별, 직업별로 선호가 다르다는 것임.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에 대해서는 40대 이하, 서북부권, 화이트칼라, 고소득층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특별도 조성’은 18~29세, 서부권에서, 그리고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특별도 추진’은 18~29세, 서부권, 학생의 지지가 높았음. 두 사업에 대한 지지는 연령, 권역에서 비슷하게 응답함. 이와는 달리 ‘스마트산단 추진으로 제조혁신 기반 조성’은 동북부권과 동부권, 블루칼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를 보였음.
- 경상남도가 앞으로 더 중시해야 할 도정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 ‘경제, 일자리’라고 응답(1+2순위)한 사람이 5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복지·건강(28.1%)’, ‘교육·보육(23.0%)’으로 답하였음. 교차 분석을 보면 60세 이상과 저소득층에서는 복지·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40대, 400~599만원 소득층에서는 교육·보육에 대한 관심이 많았음. ‘주택, 도시 재생, 부동산’에 대해서 30대 이하, 화이트칼라, 대졸 이상, 200만원 이상 소득의 계층에서 가지는 관심이 약 20%로 60세 이상, 농/임/어업, 중졸 이하, 200만원 미만 소득 계층이 가지는 관심(약 10%)의 두 배였음. 이는 부동산, 자산이 연령, 직업, 학력, 소득 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줌. 저학력, 저소득 계층에서는 자산 획득을 포기하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코로나19에서 대부분의 도민이 피해를 입었으나 그 경중은 직업별, 소득별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 그리고, 그에 대한 극복에 대한 요구도 다르고 다양함. 아울러 도민들이 기대하는 사업과 경상남도가 중시해야하는 도정에 있어서도 권역별, 연령별, 소득별, 직업별로 편차가 있으므로 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세밀한 맞춤형의 대응이 요구됨.



## 2 2020년 민선7기 2주년 도정4개년계획 이행 점검보고서 작성경과

### ■ 도정4개년계획과 이행 점검보고서

#### ●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도정4개년계획 작성 경과

- 2018년 6월 13일 김경수 도지사 당선 이후 도정 인수 작업과 함께 경상남도 도정 4개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6월 21일 ‘새로운 경남위원회(공동위원장 민홍철, 이은진)’가 출범하였음. 위원회는 기획분과, 경제1분과(제조, 항공, 조선, 소재 등), 경제2분과(농업, 환경 등), 사회분과(복지, 문화, 예술 등), 행정혁신분과 등 5개의 분과에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한편 도민들과 소통을 넓히고 정책 제안을 직접 접수하기 위해 ‘도민인수위원회(위원장 정보주, 위원 3인)’를, 그리고 민생경제를 직접 챙기기 위해 김경수 도지사가 위원장을 맡은 경제혁신민생위원회(경제혁신분과, 민생혁신분과 등 2개 분과, 위원 10인)도 구성하였음.
- 민선 7기 경상남도 도정4개년계획은 ‘새로운 경남위원회’를 중심으로 작성하면서 도민인수위원회와 경제혁신민생위원회도 제안하는 방식으로 하였음. 위원회는 약 한 달 동안의 활동을 통해 ‘(도민이)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비전으로 삼고 ‘소통과 참여’, ‘공정과 포용’, ‘실용과 혁신’을 운영원리로 하였음. 이런 비전과 운영원리를 바탕으로 ‘다시 뛰는 경남 경제’, ‘사람 중심 경남 복지’, ‘함께 여는 혁신 도정’을 3대 목표로 설정하였고 12개의 전략과 46개의 과제 그리고 140개 세부 과제로 구성하였음. 7월 26, 27일 종합 토론회를 거쳐 8월 1일 김경수 도지사에게, 그리고 8월 16일에는 도민들에게 보고회를 가짐으로 그 소임을 다 하였음. 김경수 도지사는 도정4개년계획을 통해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민생경제혁신, 사회혁신, 도정혁신 등 3대 혁신을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하였음.

#### ● 도정4개년계획 이행 점검보고서 작성 방법

- 경상남도 도정 전반에 대해 자문하는 조직으로 2018년 11월 15일, 3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위원장 이은진)」가 출범하였고, 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로 ‘도정4개년계획 이행 점검 보고서’를 6개월에 한 번씩 작성하기로 하였음.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자문위원회 내에 운영위원회, 기획위원회, 경제혁신분과, 민생분과, 문화복지분과, 사회혁신분과 등 2개 위, 4개 분과를 두었음.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전체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하고 기획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획, 작성 방법, 기준 등을 정하는 역할을 하며 4개 분과가 140개 과제에 대해 실무적인 작성을 함. 이러한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정책기획관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였음.
- 도정자문위원회는 이렇게 분과 중심으로 과제에 대한 이행 점검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지금까지 2019년 1월, 2019년 6월, 2020년 1월 등 3회에 걸쳐 ‘도정4개년계획 이행 점검보고서’를 냈고 이번이 네 번째임. 한편 도정을 시작한지 6개월 만인 2019년 1월에

나온 첫 보고서 후에는 전문위원의 필요성이 대두 되면서 각 분과에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점검보고서 작성에 지원을 받고 있음. 2020년 6월 현재 30명의 도정자문위원과 14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음.

## ■ 민선 7기 도정4개년계획 이행 점검보고서

### ● 이행 점검보고서 작성 과정

- 코로나19로 도정자문위원회를 2월 26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도정4개년계획 이행 점검보고서에 대한 작성 시기에 대해 논의를 함. 이후 코로나19가 완화되지 않아 약 3개월 후인 5월 8일 도정4개년계획 이행 점검보고서 작성과 경남연구원과 함께 진행하는 연구과제 보고서 작성을 위한 1차 회의를 진행함. 5월 21일 2차 회의를 소집하여 일정을 잡음. 일정은 6월 5일까지 자문위원 개인들이 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6월 12일까지 분과에서 점검하여 정리하였으며 6월 19일까지 기획위원회가 검토함. 이어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도청의 실국에서 검토하고 6월 25일 오전 기획위원회가 취합하여 인쇄를 하는 것으로 함.

### ● 이행 점검보고서 내용과 작성 기준

- 6월 10일 기획위원회에서는 2주년 점검보고서이므로 작성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기로 함. 1) 완료가 되지 않은 과제와 신규 과제를 중심으로 정리하지만 민선 7기 2주년이므로 이전의 세 차례 보고서에 들어간 내용이라도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나 강조가 필요한 것은 짧게라도 언급. 2) 보고서 1부 '도정 운영의 환경적 동향과 점검 경과'에 자문위원장의 '민선 7기 2년 총평과 이후 2년 전망과 과제를 포함. 3) 전략과제, 중점과제에 대한 평가와 신규 제언을 할 때에는 코로나19, 그린 뉴딜을 포함 가능. 4) 이행과제 140개 외에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2020년 연초에 발표한 청년특별도, 교육 인재특별도,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 등 3대 핵심과제와 혁신과 성장, 체감하는 변화 등 2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제시한 87개 과제를 거론 또는 인용 가능.
- 6월 18일 기획위원회와 분과장 연석회의에서는 점검보고서를 작성할 때 공약에 대한 이행 여부를 평가해야 하므로 다음의 기준으로 함. 1) 현재 140개 이행과제 중에서 준비단계 5, 착수단계 4, 실행단계 97, 완료 34로 정리함. 2) 제도나 조직 구성이 완료되었으나 예산은 이후 계속 집행해야 하는 사업 역시 완료로 하고 코멘트를 다는 방식으로 함. 3) 서부경남 KTX 조기착공,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과 같이 도지사의 공약을 중앙 정부가 채택한 경우도 완료로 구분. 4) 이행을 100%, 완료로 한 과제에 있어서도 초기 계획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점검 지표를 만드는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을 넣기로 함(예를 들어 재료연구원 승격 등).



### 3 김경수 도정 2년의 평가 및 새로운 도전과 과제

- 2018년 6월 김경수 도지사 당선자는 취임을 준비하면서 인수준비위를 발족하였음. 인수위의 임무는 도정인수와 동시에 선거운동시기에 발표한 공약을 정리하여 도지사 4년 임기동안 실행할 수 있는 도정4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음. 이에 8월에 민선 7기 경상남도 도지사직 인수위는 경상남도 도정4개년계획을 수립 발표하였음. 도정 4개년계획의 특징은 우선 실현 가능하면서도 파급효과가 큰 사업인 서부경남 KTX 사업에 선정하였다는 점임. 당시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예비타당성에 얽매었던 사업을 국비로 그리고 예비타당성 면제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었음. 이는 2019년 초에 확정되어 추진 중임. 이외에도 부진하던 부산신항만 사업, 남해안 철도사업 등도 크게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음.
- 두 번째로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단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임. 이는 국가공단의 선정은 물론 공장과 산단의 스마트화를 통해 경남의 제조업을 되 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추후 국책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있음. 스마트 산단 사업을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필연적인 추세라고 인정하면서도, 고용축소가능성과, 기업들의 소극적인 대처로 더디었던 사업이었음. 그러나 2018년 말에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이제는 스마트 산단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으로까지 진전 되고 있음. 이는 경남 제조업의 발전의 난관이었던 제조업의 스마트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음. 스마트화는 제조업만이 아니라, 도시재생, 농업, 어업을 통틀어서 진행 되고 있음. 현재는 코로나 19 이후의 미래 추세에 걸맞는 경제형태로서 디지털 경제를 거론하는 형편에 있음.
- 세 번째로 사회혁신을 담았음. 사회혁신은 선거시기에는 본격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회 계약이라고 판단하였음. 사회혁신의 내용으로는 도민들의 참여, 행정기관간의 협치와 민관 협치, 행정개혁을 담았음. 이러한 사업은 예산이 부수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제도를 바꾸고, 참여자들의 행위를 바꾸는 것이기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업임. 사회혁신추진단과 행정혁신팀이 가동되어 움직이고 있음. 기존의 조직 관행을 바꾸는 것이기에 반발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개방과 참여, 소통과 공유, 성과지향성 조직과 인사시스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과제임을 확인함.
- 금년에 김경수 도지사는 청년특별도, 교육인재특별도, 그리고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내세웠음. 청년을 우선하는 정책은 이미 도정4개년계획에 곳곳에 들어가 있었지만, 전면으로 내세우지는 못했음. 청년은 경남의 미래를 짊어질 세대이기에 이들을 우선하는 정책은 극히 당연하지만, 정책과 사업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있음. 그러나 뚜렷한 사업이나 정책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음. 청년의 정책적 이해를 확인하고, 이를 대표하는 청년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음.

- 교육인재 특별도는 도정4개년계획에는 이전 도정이 공공성을 훼손한 것을 회복하는 정도의 공역을 내세웠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인구감소, 잠재성장력의 제고, 기업의 미래발전, 마을공동체의 거점으로서의 학교, 디지털 교육의 고민을 더한 종합적인 방안을 담고 있음. 그리고 교육인재에 대한 강조는 경남이 처한 위기를 해결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동남권 특별자치도는 기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을 만들자는 프로젝트임. 도정4개년계획에서는 부울경 간에 산재한 갈등 요소들을 해결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나, 금년 초에 발표한 김경수 지사의 부울경 특별자치도는 갈등해결을 넘어서는 대한민국의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지역을 만들자는 프로젝트로 여겨짐. 경남에서 파생되어 나간 부산과 울산은 실은 하나의 산업권 생활권을 이루어 실고 있었음. 행정권으로의 분리는 생활권, 공장입지와 연구개발 입지의 부정합을 낳았고, 이는 도민들의 교통불편, 정체성 혼란, 경남권에서의 소외논란을 낳고 있음. 동남권의 인구규모는 스위스나 이스라엘에 해당함. 스위스나 이스라엘이 자치와 민주주의, 인재양성과 창업의 나라로 알려진 것에 비추어 보면, 부울경이 동남권 특별자치도로 통합하여 자치와 민주주의, 인재양성과 창업의 새로운 모델로 대한민국을 정치경제적으로 선도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임.
- 금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의 전파는 경남의 도정에 새로운 과제를 던졌음. 이에 대해 김경수 지사는 기본소득 및 재난 지원금, 9월학기제의 도입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음. 재난지원금은 정책으로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음. 아울러 국가가 제시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확충과 같은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추진하고 있음. 도정4개년계획에는 디지털 뉴딜과 같은 요소는 스마트산단 과제를 통해 시동을 건 바 있어서 비교적 쉽게 수용되고 있음. 교육, 소상공인, 문화 예술, 보건 의료 면에서도 더욱 더 디지털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그린 뉴딜은 에너지 전환으로 상징되는 수소경제가 도정4개년계획에는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음. 그러나 생태적 전환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그리 크지 않음. 따라서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이라는 인류 생존의 위기에 대응하는 수준의 생태적 사고전환을 요하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함. 이런 면에서 밀집된 환경에서의 거주와 생활, 공간환경을 넘어서는 제안들이 들어가야 함. 모든 정책의 공간과 생태를 감안한 정책적 전환이 절실함.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사회 안전망에 대한 논의는 도정4개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소득, 의료체계, 고용보험 등과 같은 근본적인 논의가 촉발되어야 함. 도정4개년계획에서는 이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정책이 담겨져 있지 못함. 코로나19 전염병 이후의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의 미래의 경제, 재정, 복지, 삶의 틀의 전환을 예견하는 논의가 진전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할 시점임.

제2부

## 목표 및 전략별 점검



## 전략1: 경남 신경제지도의 체계적 이행

### 추진상황

- 과제1. 경제혁신 자원 1조원 및 경제혁신체계 구축 (3개 세부과제)
  - 완료 (2): ②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행정 조직 개편 ③ 산업·지역별 고용실천 전략 수립
  - 실행 (1): ① 경제혁신 자원 1조원 조성
- 과제2.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 사업 확충 (5개 세부과제)
  - 실행 (5): ① 핵심산업 고도화(항공, 조선해양, 나노융합, 로봇 등) ② ICT융합 개방형 제조운영체제 개발(G-MBP 개발의 변경 과제) ③ 스마트공장 구축 ④ 스마트산단 조성 ⑤ 경남형 혁신인재 양성
- 과제3. R&D 체계 혁신으로 사업화 촉진 (7개 세부과제)
  - 완료 (3): ①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④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 ⑦ 중소기업 R&D사업화 지원센터 설립
  - 실행 (3): ② R&D 공동연구플랫폼 구축 ③ 국내 주요 연구기관 및 대기업 R&D센터 유치 ⑤ 경남소프트웨어산업진흥 플랫폼 구축(경남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 설치의 변경과제)
  - 준비 (1): ⑥ 소재부품연구단지 조성
- 과제4.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1개 세부과제)
  - 실행 (1): ①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 과제5.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1개 세부과제)
  - 실행 (1): ①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 과제6. 서부경남 혁신클러스터 조성 (5개 세부과제)
  - 실행 (3): ① 이전공공기관 연계 특화산업 기업유치 및 산업지원 중추도시 육성(혁신도시 시즌2) ④ 친환경·고내구성 세라믹 소재부품을 경남 주력산업으로 육성 ⑤ 지역전략 향노화 산업 육성
  - 착수 (1): ③ 희유금속 소재부품클러스터 조성
  - 준비 (1): ② 항공ICT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과제명 및 단계	준비	착수	실행	완료
경제혁신 자원 1조원 및 경제혁신 추진체계 구축 (3)			1	2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 사업 확충 (5)			5	
R&D체계 혁신과 광역 연구 플랫폼 구축 (7)	1		3	3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1)			1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1)			1	
서부경남 혁신클러스터 조성 (5)	1	1	3	

## ■ 점검의견

### ● 경제혁신 자원 1조원 및 경제혁신체계 구축

- 경제혁신 국비 재원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지자체 매칭 여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민선 7기 나머지 2년 동안 신규 사업 발굴 중요
- 신사업 발굴을 위한 조직으로 “경남연구원·경남TP 신사업 기획전문 조직” 운영 등으로 신규 사업 기획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신규사업 발굴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발굴된 사업의 선정, 그리고 실행과정에서 발굴 기관만의 사업수행이 되지 않도록 전체 과정을 조직화하는 게 중요
  -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등을 고려, 위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Covid 19 이후 제조 및 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성장 계획의 재검토 및 보완
- 경제혁신추진위 위상 관련 재원확보 기능은 양호하게 수행(민선7기 2년 동안 총 7,257억원), 그러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 수행에 한계(2019.11.6일 도지사 면담 시 문제제기), 경제혁신추진위원회 분과 활성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산업고도화 및 혁신성장, 산업지원 분과활성화(1주년 점검의견)
  - 분과에서 제기된 의제들의 정책과정,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타위원회, 협의회(지역혁신 협의회)와 역할의 분명한 분담, 정책적 협조
- 향후 계획에서 제기된 바, “한국형 뉴딜 사업 맞춤형 사업”,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린뉴딜(Green Newdeal)” 관련 신규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COVID19 이후의 지역경제 혁신성장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 사업 확충

- 신성장사업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항공우주, 조선해양, 지능형기계, 로봇산업, 나노융합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최종 제품 단위의 산업 구분이 2년이 지난 현재에도 타당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즉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산업기술들을 보면, 기초 요소기술을 바탕으로 공통적인 기술요소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상당 산업군에서 활용되고 있음. 그러므로 사업추진을 위한 현실을 감안해 산업분류를 재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봄. 또한 이들 산업 이외의 산업 육성에 대한 경남의 지원 정책은 어떻게 모니터링되고 있는지를 진단할 필요가 있음
- 대체로 관련 센터 구축 등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센터 운영 및 전문 장비 및 기술 관련 인력수급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 외부에서 보면 대부분 센터설립 사업으로 오해 소지가 있음. 추진상황보고서에서 연차별 이행계획 부분에 인력/주요설비 정도는 추가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핵심산업고도화 관련 개별산업의 육성을 통한 고도화도 중요하지만 각 산업에서 5G 기술과 연계한 고도화 전략 필요(스마트 팩토리 구축사업 관련 실감형 콘텐츠와 클라우드 게임과 같은 5G 스마트폰 가입자 대상의 B2C서비스를 넘어 다양한 5G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모바일엣지컴퓨팅(MEC) 등) → 2020년 자문위 신규제안과제로 “엣지데이터센터” 과제 추진 상황 점검 필요
- 엣지데이터센터는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다고 보고(혁신(제조) 데이터 센터 구축사업 추진 (20-22년 예정),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센터 구축 논의 중)되고 있으나 급격한 기술적 환경 변화에 비해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 필요
-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경우 본래 취지와 어긋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 점검 필요하며, 도의 구축지원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 즉 단순히 일부 자동화설비나 SW도입이 진행되어 기대효과에 한계가 있음. 물론 지원규모에 대한 한계 때문도 있지만 실제 스마트공장 구축을 한가지 모듈 또는 공정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공정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 것을 투자할 것인지 그 효과성을 비교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사전에 스마트공장 선정시 좀 더 세심하게 검토되어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자동화 장비 보급 이외에 궁극적인 스마트공장을 위한 제조 데이터 수집은 사업 성과관리 운영지침에도 없는 상황. 따라서 도 차원의 중소기업벤처부에 건의를 통하여 스마트공장공급사업의 본질적인 사업 목적으로 전환 시도 필요. 사전진단 활성화를 통하여 업체별 유형에 따라 수행 사업의 다각화 필요. 기계 중심 산업에서 ICT융합(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바이오(항노화, 식품, 신약 등), 해양산업 및 관광 분야, 플라잉 개인 수송기기, 양자 컴퓨팅 등의 다양한 아이템 발굴 및 육성 정책 추진 필요  
⇒ 중앙부처 중심이 아닌 경상남도가 주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와 정책적 뒷받침 필요
- ICT융합개방형 제조운영체제 개발 과제의 경우 20년 4월 공모사업 선정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지자체 및 중앙정부 예산확보가 필요
-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1-1-2-③, 경남형 혁신인재 양성(1-1-2-⑤)의 경우, 지속적인 자원 확보가 필요함을 애로사항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 재원확보도 중요하지만 실행조직 및 거버넌스 개편에 더 세심한 계획이 필요
  - 인력양성의 경우 줄어드는 국비 감액으로 인하여 지역-대학협력 지역혁신플랫폼 사업과 연계를 장기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다만 아직 공모 전이기는 하지만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서 지자체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플랫폼 사업을 R&D사업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 향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이러한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 깊은 검토가 필요
  - 대학별로 진행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경남소프트웨어산업진흥 플랫폼 사업(과제 1-1-3-⑤)의 인력양성 사업간 중복 문제 등 시너지가 극대화되도록

경상남도과 관련 기관, 대학간 협력이 필수(예를 들면 창원대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사업(스마트제조혁신선도대학사업), 21년 경남 ‘지역혁신성장계획(안)’에 따르면 스마트 제조혁신 선도대학 사업(사업비 3,750백만원) 확인)

(단위 : 백만원 / 2019년 예산 기준)

분야	예 산	지원사업	내용
인재 양성	2,064	경남형 스마트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학생, 미취업자 대상 장기교육)
	400	스마트공장 재직자 및 전문가 교육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재직자 및 전문가 대상 단기교육)
	2,800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SW교육 및 강사양성 프로그램에 전문가 자문 또는 참여방안 마련

출처: 2021년 경상남도 지역혁신성장계획 수정(안)

- 스마트산업 조성사업의 경우 ICT앵커기업 유치 등으로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 R&D 체계 혁신으로 사업화 촉진

- 지역 R&D혁신기관, 지역혁신선도대학 사업 등 그동안 지역혁신 관련 중앙정부사업의 성과를 엄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음
- 강소연구개발특구 3곳 지정(의결 6.19, 고시 8.7))으로 완료된 사업으로 표시되어 있으나(100%) 이후 사업화 진행에 있어서 기본 방향 불분명(기업사업화, R&D융합, 고도화거점 등 사업별로 내용이 무엇인지, 대학과 지역혁신기관의 역할분담, 타 국비 공모사업 등 조달 방안 등). 또한 ICT제조기술에 대한 특화분야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제조ICT에 대한 기술핵심기관의 강소연구개발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R&D공동연구 플랫폼(과제 1-1-3-②)의 경우, 수소경제 관련하여 협의회(워킹그룹 등) 틀을 형성하는 단계라고 판단됨. 향후 경상남도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사업의 방향과 부합하도록 방향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R&D공동연구 플랫폼의 내용 중 수소경제권 관련, COVID-19 이후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하여, 2020년 경상남도의 3+2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중요성과 시급성을 더 부각하고 정책과제 개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주요 연구기관 및 대기업 R&D센터 유치 과제의 경우
  - 전자부품연구원(KETI) 동남권본부 유치 후에 확보된 2020년 예산의 지역 기업에 대한 수혜 방안 마련 검토 필요 → 스마트산업추진단 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기업과 협업 모델을 발굴했으나, KETI로 추진 주체가 바뀐 후에는 지역기업의 참여나 관련 사업에 대한 수혜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 중
  - 연구기관 분원 유치 대상 발굴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진행상황 (이전지역, 이전 대상 기관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은 기존처럼 내주화/외주화냐를 고민하기보다 인프라를 제공하고 더 많은 참여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자 에이전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



- 재료연구원 승격(1-1-3-④)문제는 '원' 승격으로 이행률 100%를 달성하였으나 향후 계획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지역 연구개발사업과 연계 방안 발굴 및 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원 승격에 따른 조직정비 과정에서 경상남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 문제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 상 플랫폼 구축 정도로 진행
  - 이 사업 역시 진흥원 설립의 전 단계로서 경남TP를 활용하며, 중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업진행하는 것이 바람직(20년 1월 점검보고서 의견)
  - SW산업 진흥을 위한 기존 조직(TP)의 역할(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지역R&D역량 강화라는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중소기업 R&D사업화 지원센터 관련하여 제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따라서 중소기업의 R&D, 제품개발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R&D 투자지원 등 정부 지원이 필요
  - 중소기업 R&D사업화 지원사업은 이행률 100%를 달성하였으나 성과 모니터링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음. 즉 센터가 설치된 테크노파크(TP) 자체적으로 수행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평가 절차나 기구가 필요(20년 1월 점검의견)

#### ●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 1주년 점검 시와 비교하여 30% 진척률을 보이고 있음. 사업 방향과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경상남도의 의지를 잘 담아낼 수 있는 과제로 판단되며, 2020 경남도정 전략 로드맵3+2와 연계가 필요
- 제 2신항 건설, 동북아물류 R&D센터 스마트 물류단지, 항만서비스 자유구역 지정 등 세부과제 등은 부산지역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생협의회를 운영하고, 동시에 초광역권 논의(동남권 메가시티플랫폼) 진행에 따라 정책방향을 조율할 필요가 있음
- 항만서비스자유구역 지정의 경우 2020년 4월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 고시(산업부), 용역 완료된 선박수리·개조산업 클러스터와 연계, 선박 입출항 및 선용품 공급, 서비스 콘텐츠 제공 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도 차원의 준비 상황 점검 필요
- 추진 애로사항에 제시된 제2신항 건설에 따른 피해지역 주민과 어업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유라시아 철도망 연결, 미래바다산업 육성, 어촌환경 스마트화를 과제로 신해양산업 창조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와 정책 협조 필요

#### ●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 서부경남 KTX 조기착공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조기 이행 필요
- 고속철도의 안전 운행 및 항공·조선산업 활성화에 따른 물류 이동 증가에 대비하여 김천~진주 간 복선화 건설에 필요한 관계부처 협의 및 여론 조성이 지속적으로 필요
- 신설역사 설치 및 건립 관련,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업의 당초 취지와 원칙에 충실하게 하되 관련 타 시군구의 주장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

## ● 서부경남 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광역경제권 구축

- 이전공공기관 연계 특화산업 기업유치, 산업지원 중추도시 육성(혁신도시 시군2)의 경우 정주여건이나 상생발전 분야 실적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특화산업 분야(항공우주산업 및 관련 인력양성)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등에서는 미흡
- 혁신도시 지역우수인재 채용과 관련하여 “지역선도대학 사업”의 내용을 검토하여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검토할 필요도 있음, 즉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의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특화산업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평가), 항공우주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고민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이런 점에서 지역-대학 협력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이 선정될 경우 2차년도의 과제에 항공우주관련 인력양성 기관으로서 ‘항공우주 대학원대학’ 등을 계획할 필요도 있음
- 항공ICT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의 경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2019.6)으로 탄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되나, 관련 인력양성 시스템을 갖추는데 지역 거점대학의 역할이 미흡(지역-대학 기반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기획과 연계 필요)
  - 다부처 협력사업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
- 경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21년 완공 예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능 측면에서 지자체(진주)의 지식산업센터(망경동 소재, 완공)등 유사 기능 시설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지 검토. 이런 경우 정책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검토해야 하며, 지자체의 자율권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국가 정책을 따를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 희유금속 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의 경우, 희유금속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부 R&D 연계방안 검토, 광역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북한 광물자원 활용과 경제협력을 위한 워크숍 등을 활성화할 필요
- 친환경 고내구성 세라믹 소재부품을 경남주력산업으로 육성 과제의 경우, 수송시스템 기반구축사업의 원활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 필요
- 지역전략 항노화산업의 경우, 소재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와 관련 연구장비 공동 활용 시스템구축, 산업화(사업화)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항노화엑스포, 항노화 산업단지, 클러스터, 체험지구 조기 건설 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항노화산업의 컨트롤 타워로서 지역 내 관련 기구 정비,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의 소속 변경 및 지원 확대 등이 필요

## ■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 총평

- 목표 1 “다시뛰는 경남경제”의 전략1(경남 신경제지도의 체계적 이행) 분야 6개 과제는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제조업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추진상황보고서는 실제 추진상황에 대한 방향성, 전략 등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예를 들면 일부 사업의 경우 경상남도 차원에서는 실효성이나 성과측면에서 적절할 수 있으나 어떤 사업은 추진 내용상 시군 단위 사업으로는 타당성 측면에서 다소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책수립시 효과성은 경상남도 뿐만 아니라 시·군차원에서도 분명히 효과성이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즉 추진 정책이 경상남도 큰 틀에서는 적절하지만 시군으로 실제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각 과제별로 이행률 혹은 집행률 실적 차원에서 과제별 차이가 심하며, 이는 공약과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행을 자체만으로 과제 이행 수행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과제 달성을 위하여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은 지자체 매칭 부담을 가중시켜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런 점들을 추가적인 국비확보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됨
- 동시에 2020년부터 지자체 주도하에 전개될 국비사업의 구조, 거버넌스 등을 잘 조직하여 사업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경상남도(지역)가 주도하는 제조업 혁신체계 구축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지역 중심 R&D체계혁신(과제3)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 기존 지역 R&D혁신기관 등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 플랫폼사업을 통하여 지자체-대학-지역 내 혁신기관 간 연계·협력구조 구축이 필요
  - 동시에 경상남도 차원의 R&D 기획 및 관리 등을 포함함 경상남도 차원의 전담 조직(기관) 설립 관련 R&D계획인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과정 모니터링, 지역-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과 잘 연계하는 것이 중요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경우 2020년에 기존에 구축된 스마트공장 보급에 대한 실제 운영상황 및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특히 스마트 공장 운영 관련 데이터의 경우 스마트산단과 연계하여 운영관리 측면에서 상호 활용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진행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 제조 인력양성 관련하여 양적 목표에만 맞추어져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적인 목표는 있는지 검토 필요
- 동북아물류플랫폼(제2신항 등)건설과 KTX광역경제권 구축은 1) 관련 기초지자체와 조율에 있어서 경상남도의 주도적,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며 2)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초광역 경제권 수립, 경상남도의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상과 관련한 대응체제 구축 논의 및 체제 구축이 필요
- 20년 1월 점검보고서에서 신규 제안한 경남신성장상생기금 조성은 중장기과제(참고 자료 참조)로 설정되어 있으나, 지역사회 및 해당 이해당사자들이 동 기금 조성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 설득, 여타 사업에 있어서 관련 지자체들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 신규 제안 과제

### - 제조혁신 스마트(ABBC: AI-Big Data-Blockchain-Cloud) 인력양성센터 설치

- 스마트인력양성 재직자 교육 관련 예산(도비 4억원) 부족, 미취업자, 대학생 대상 교육 사업과 연계 부족
- 따라서 지역내 대학(경상대, 경남대, 경남과기대, 인제대 창원대 등)과 관련 기업(NHN, 삼성SDS, 센트랄, LG전자, 두산중공업 등), 지역혁신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스마트핵심인재 양성 컨트롤 타워**를 구축, 기 진행중인 사업(각종 인력양성 사업 및 빅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등) 관련 예산의 통합적 운영, 성과 모니터링, 양성 인력의 활용 방안 강구 등 종합적 관리가 필요
- 예산 확보 차원에서 엠티데이터센터나 빅데이터센터 등 국비 혹은 공모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한 제조업기업들의 신속한 대응 등 사안의 시급성이나 긴급성을 따져 지자체 주도의 사업방식(예산 확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대학의 인력 및 재직자 교육뿐만 아니라 COVID-19 이후 가동중단기 혹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인력들에 대한 직무전환 교육을 통해 인적자원 업그레이드를 지향
- 2020년 교육부 지자체-대학협력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역시 제조혁신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것으로서 대학과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창원 이외에 경남 전체로 확산할 필요가 있음

### - 모바일 엠티데이터센터 건립

- 2020년 2월 점검 시 엠티데이터센터 설립을 신규과제로 제안 이후 중장기 과제로 설정
- 예산 확보 차원에서 엠티데이터센터나 빅데이터센터 등 국비 혹은 공모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한다고 해도,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한 제조업기업들의 신속한 대응 등 사안의 시급성이나 긴급성을 따져 지자체 주도로 긴급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방식(예산 확보)의 전환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R&D체계혁신 및 사업화 차원에서 각 산업에서 5G 기술과 연계한 고도화 전략 필요, 즉 스마트팩토리 구축사업 관련 실감형 콘텐츠와 클라우드 게임과 같은 5G 스마트폰 가입자 대상의 B2C서비스를 넘어 다양한 5G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모바일엠티컴퓨팅(MEC) 등에 기반한 데이터 센터와 이를 사업화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모바일 엠티데이터센터를 건립할 시에는 H/W구축보다는 지원 인력 및 지원 체계 수립에 중점을 두며, 기존 상용 혹은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 항공우주아카데미(학,석,박사) 설립

- 기존 대학의 역할이나 운영 관련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고, 또한 항공 우주 관련 인력양성에 대학에 의존해야한다는 생각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필요가 있음

- 항공우주관련 기능 및 초등 인력양성 기관 통합적 운영(지역혁신선도대학 기능 일부 이전 등을 통한 학부생 양성, 거점대학 주도), 설립 형태는 칼텍처럼 단과대 형태로서 전문대/대학교/대학원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의 단과대학일수도 있고, 항공 우주관련 고숙련 인력 및 연구개발인력 양성 아카데미 형태 혹은 수도권의 항공대학 등을 이전시키거나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고숙련 설계 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혹은 단과대학은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지역에 소재한 대학(전문대학 포함), 재정력이 있는 공사가업이 공동으로 재정을 출연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국내 최초의 ‘거버넌스형 대학원대학’
- 예산은 총 400억 원 규모(국비: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선정시, 지방비, 고용노동부, 경남 신성장 상생기금 등)

## 전략2: 도민에게 희망주는 좋은 일자리 확대

### 추진상황

- 과제7. 청년 일자리 확충 및 사회안전망 구축 (6개 세부과제)
  - 완료 (1): ⑥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 실행 (5): ①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확대 및 채용비리 예방 ②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 및 기업맞춤형 일자리 추진 ③ 청소년근로조건 지킴이 ④ 부산경남창업사관학교 분리 유치 ⑤ 경남기반창업투자회사 설립
- 과제8. 재도약을 돕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5개 세부과제)
  - 완료 (2): ②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④ 경남창업지원학교 유치
  - 실행 (3): ① 경력단절여성 지원 ③ 일자리더하기 장려금 도입 ⑤ 노인일자리 확대 및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 과제9.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1개 세부과제)
  - 실행 (1): 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과제별 추진 단계	준비	착수	실행	완료
7. 청년일자리 확충 및 사회안전망 구축 (6)			5	1
8. 재도약을 돕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5)			3	2
9.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1)			1	

### 점검의견

- 모두 12개 세부과제 중 3개는 완료, 9개는 실행 단계. 3개 과제 전체의 평균 이행률은 66.5%로 양호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과제별 이행률 평균은 최소 30.0%(9.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에서 최대 72.6%(8. 재도약을 돕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로 편차가 발견됨
- 문제는 이들 과제가 실행 완료되면, 과연 전략 2 ‘도민에게 희망주는 좋은 일자리 확대’가 실현될 거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명료함
  - 과제별 이행 현황 점검 및 그 현황이 좋으면 좋은대로 나쁘면 나쁘대로 왜 그런지 그 이유와 기제에 대한 분석과 성찰 요
- 청년일자리 확충 및 사회안전망 구축
  - 정원 100인 이상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청년의무고용률 확대(3%~5%)를 추진한 결과 2019년 4개 기관, 57명 고용, 정원 대비 청년신규고용비율 7.3% 달성 실적

- 2019년 전국 공공기관의 청년신규고용은 정원의 7.4%로 나타남 (고용노동부. <2020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보도자료 2020.02.20.)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청년고용의무 대상기관은 정원 30명 이상 공공기관 및 공기업임. 도내 정원 30명 이상의 공공기관, 공기업을 대상으로(도내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그리고 시군의 지방공기업도 포함하여) 정원 대비 매년 청년 고용의무 이행 현황 분기별 점검 필요함
- 2020.3.2.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기관 명단에 경상남도 내 지방공기업으로 함안지방공사가 포함됨. 그 원인 분석, 미이행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반영 등 이행도려장치는 물론 공공기관들의 자발적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추진이 요청됨
- 기업맞춤형 일자리 추진: 경남형 트랙사업 활성화 지원
  - 경남형 트랙 사업(2013년 도입)이 그동안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성과 증진 및 애로 해소를 위한 요인 분석이 요청됨
- 청소년근로조건 지킴이
  -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향상을 위해 노동인권교육 확대 실시 필요
  - 체당금신청 및 체불임금 소송 무료지원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노무사협회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제도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 있음
  -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사업장 선정하여 홍보하는 방안도 필요함
- 재도약을 돕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여성지원 일자리 정책은 작년대비 예산이 거의 동일한 수준임. 일자리 정책의 효과를 따져본 후 실질적인 지원확대를 위해 예산증대를 고려할 필요 있음
  - 창업지원 서비스
    - 예비 창업여성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경우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전반기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1건에 불과하여 후반기 창업 실적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에도 코로나 여파가 이어질 듯 보여 올해는 여성 창업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 정국엔 여성 비정규직이 더욱 양산되고 주로 여성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창업지원보다는 여성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여성 일자리를 해결하는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 현재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민주노총, 한국노총, (사)경남여성일과미래창조 3곳에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바,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예산 중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서 실제 센터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는 여성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장 취약했던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해야 함



- 새일여성인턴 인센티브 확대

- 새일여성인턴 인센티브제는 노사 모두에게 호응이 좋고 여성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향후 이를 홍보하고 더욱 예산을 늘릴 필요 있음
- 다만, 3개월 계속 고용이 확인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나, 장기간 근로를 촉진하기 위해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도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있음

## ■ 총평

- 도민에게 희망주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광역 지자체로서 경상남도는 도가 직접 관리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의 도내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18개 기초지자체와 연계 협력 조정하는 역할을 보다 더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담당할 필요가 있음
  - 도내 18개 시군 지자체의 특수한 사정과 경험을 잘 조정하고, 중앙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재정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광역지방정부로서 주축적 역할을 확보해야 함
  -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 적용을 본분으로 하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는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맞춤형으로 추진할 때 자기 구실을 함
  - 도내 청소년근로조건 지킴이와 같은 과제 이행도 도 자체의 예산이나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고용노동부 및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면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여성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여성 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최근 코로나 사태가 고용시장에 미친 충격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비정규직 및 노년층에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나면 그 중에서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2월과 3월 취업률이 급감하였는바,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있음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성비정규직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함(현재 여성비정규직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점검을 통해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할 필요 있음)



## 전략3: 공정하고 활력있는 민생경제

### 추진상황

- 과제10.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지원 (8개 세부과제)
  - 완료(1) : ③ 경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 실행(7) : ① 제로페이 도입 ② 경남소상공인 사랑상품권 ④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⑤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희망장려금 지원 ⑥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 지원 ⑦ 소상공인 유통구조 선진화 지원 준비 ⑧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과제11.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확립 (2개 세부과제)
  - 완료(2) : ①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확립 ② 장기채무자의 새 출발을 돕는 금융복지제도 확충
- 과제12. 중소기업 고용·투자 환경 개선 (3개 세부과제)
  - 실행(3) : ① 중소기업 시설·설비 투자 및 경영안정자금 확대 ② 경남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③ 경남 청년내일채움공제
- 과제13. 사회적 경제 활성화 (2개 세부과제)
  - 완료(1) : ① 도지사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 실행(1) : ② 사회적 경제 활성화(32%)

과제별 추진 단계	준비	착수	실행	완료
10.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지원 (8)			7	1
11.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확립 (2)				2
12. 중소기업 고용·투자 환경 개선 (3)			3	
13. 사회적 경제 활성화 (2)			1	1

### 점검의견

-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지원
  - 제로페이 도입
    - 과제이행율 산출 기초를 총사업비 대비 집행액보다는 가맹점 가맹율로 변경해 제로페이의 확산 정도 측정을 권고함(2019년 하반기)
    - 경상남도 제로페이 가맹점은 40,360개(한국간편결제진흥원 2020.6.1.)로 가맹률은 18.0%로 추정.(2020년 가맹률 목표 20%)
    - 제로페이 가맹점 증가 추이 및 결제 금액 및 결제 건수 등을 초기부터 현재까지 분석하여 전략 수립 요

- 경남소상공인 사랑상품권
  - 경남사랑상품권의 판매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필요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 지원
  - 총사업비 대비 집행률 및 이행률 20%로 저조
  - 집행률 및 이행률 저조 원인 분석하여 이행률 제고(적극적 홍보 등 필요)
- 소상공인 유통구조 선진화 지원

#### 〈경남 소상공인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 적극적인 홍보 및 사업실행 필요

#### 〈소상공인 중소유통 공동구매 물류센터 건립〉

- 사업 추진시 설명회, 공청회 등은 물론 소상공인의 의견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업계획 수립 요망
- 경남창원도매물류센터 등 경남내 도매물류센터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 후 실제 중소유통업체에게 도움이 되도록 김해유통물류센터 건립 요
- 경상남도 내 중소물류센터 운영현황 및 문제점 파악 필요

### ●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확립

-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확립
  - 이 과제의 이행계획에는 「상생협력사가 활성화 방안 등 상생협력 관련 심의·자문」이라고 되어 있으나 보고서에 상생협력사가에 대한 언급이 없음

### ● 중소기업 고용투자 환경 개선

- 경남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 경남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의 홍보 필요. 사업을 모르는 중소기업이 많음
- 경남 청년내일채움공제
  - 경남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홍보 필요. 사업을 모르는 중소기업이 많음

### ●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위원회 신설 등 민관 거버넌스 구축,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등 민관협치에 기반하여 대체적으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또한 신규사업으로서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이차보전) 사업,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지원사업(진주, 김해)선정, 이행과제 추진상황 작성 이후이기는 해도 사회적경제 기금조례가 의회를 통과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음(6.18)

-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중 2020년 민관 거버넌스 지원의 경우 집행률 3.1%로 매우 저조. 이는 COVID-19 이후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적경제위원회 등 적극적인 의제 개발과 민관거버넌스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 부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직제 개편으로 사회적경제과가 ‘사회적경제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나 정책시행과정에서 기존의 조직과 차별성이 보이지 않음.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이나 중간지원조직과의 협업, 그리고 경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민관협치 방향성을 견지하고 이를 통해 정책을 실행하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보조금 사용 지침 등)
-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상남도 정책과 집행이 위탁기관인 경남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업무로 좁게 인식되어서는 안 됨. 좀 더 적극적인 정책 개발을 위한 노력과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공약과제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추진단 사업으로 진행되는 정보화마을 관련 사업, 그리고 공유경제나 청년부흥프로젝트(창조경제혁신센터 위탁 혹은 협업) 관련 정책 실행과정을 알 수 없음
-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의 경우, 하드웨어 사업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나(5월 현재 집행액 0원이며, 누계 집행률 0.4%) 아직 실시설계 단계로 이후 예산집중을 통해 이행률 제고가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콘텐츠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민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경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량 확대도 중요하지만, 경남형 사회적경제에 부합하는 일자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환경(경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일자리지원사업 등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 대상 선정 및 사업비 배분에 있어서 사업방향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사전 교육 등) 재편 등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민간위탁의 통합지원기관 운영에 있어서 사회적경제 조직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사결정구조와 사업 운영이 필요함(민간위탁 사업제안서 등 검토 필요)
- 중앙정부 중간지원기관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노력 필요

## ■ 총평 및 개선 권고

### ● 총평

- 과제 이행률을 예산대비 집행액으로 산출하기보다 사업을 통한 궁극적인 목표치에 대한 성과로 산출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음(예산은 집행되었으나 실제 성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음)

-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의 경우, 과제 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들과 과제들 사이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 과제(과제 10~12)관련, 기존 중소기업 대상 사업의 경우,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홍보가 더 요구되는 상황이며,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 진행 상황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13-②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담당부서인 사회적경제추진단의 적극적인 정책 발굴, 이를 위한 사회적경제위원회(실무추진위, 전략TF)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상남도의 지원사업비(보조금 등) 사용 상의 제약 등 개선 사항 마련 필요
- 사회적경제 활성화 과제 관련 사회적경제추진단 직접 사업인 정보화마을 관련 사업의 성격과 개선 방안 마련 필요. 또한 공유경제 육성 및 청년부흥프로젝트(창조경제혁신센터 위탁 혹은 협업)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과의 공동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위원회 등 심의를 통해 사업을 실행할 것을 개선 권고함

#### ● 개선 권고

-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재난 지원금 지급 및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중 사업장과 주거지가 다를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어 불편부당한 경우 발생하여 개선 권고 (특히, 운수배송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 경우 및 일반 소상공인 경우에도 주거지와 사업장이 다를 경우 지원 제외)

## 전략4: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조성

### 추진상황

- 과제14.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으로 먹거리 공공성 강화(1개 세부과제)
  - 실행 (1): ①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으로 먹거리 공공성 강화
- 과제15.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실천 확대(2개 세부과제)
  - 완료 (1): ① 경남농산물 수급안정 및 최저가격 보장
  - 실행 (1): ② 경남 공익형직불제 추진
- 과제16. 미래형 스마트 농업인 육성(2개 세부과제)
  - 실행 (2): ① 청년 취농인턴제·취농직불제 및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② 경남형 스마트 팜 조성 및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
- 과제17. 농어업인과 함께 하는 협치농정 실현(1개 세부과제)
  - 실행 (1): ① 경남농어업특별위원회 및 농어업회의소 설치
- 과제18. 수산자원 고부가 가치화로 살기 좋은 어촌 조성(1개 세부과제)
  - 실행 (1): ① 스마트양식장 조성 및 어촌 6차 산업화

과제별 추진 단계	준비	착수	실행	완료
14.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으로 먹거리 공공성 강화 (1)			1	
15.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실천 확대 (2)			1	1
16. 미래형 스마트 농업인 육성 (2)			2	
17. 농어업인과 함께 하는 협치농정 실현 (1)			1	
18. 스마트양식장 조성 및 어촌 6차 산업화 (1)			1	

### 점검의견

-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을 위한 공공성 강화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먹거리공공전달체계의 인식 전환과 푸드플랜의 실효성을 위한 세부 과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짐. 학교급식 꾸러미 배송, 과일꾸러미 등을 통한 비대면 직배송 운영 등은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보지만, 경상남도과 교육청, 농협, 로컬푸드(사회적 경제) 조직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대한 각종 장벽, 애로점이 드러남(계획하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소모됨). 비상한 시기에 맞는 선시행 후평가 등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먹거리전달체계의 혁신 전략이 요구됨

- 세부과제 실행을 위한 담당부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중점과제 수행을 위한 담당부서의 한계가 많음, 먹거리과제를 국가푸드플랜 아래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다수의 지자체는 먹거리 담당부서의 기능과 역할을 상향조정하는 추세인데 경남은 핵심 정책과제임에도 여전히 담당계(팀)에 머물고 있음.(최소한 담당과 승격이 필요함)
- 지난 6개월 정도 먹거리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이 거의 없었음. 먹거리위원회 운영 혁신을 통한 기능과 역할 재조정 필요(농특위 기획단과 연계하여 즉각적 기획과 제안, 실천 중심의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함)
- 소비지역 중심인 부산의 푸드플랜과 공유해야 하며 부울경 광역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운영 과정에 민간의 참여 보장이 여전히 없음, 관의 주도를 기반으로 민간의 협의체가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선언과 실천을 제시해야 함

### ●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실천 확대

- 빅데이터 기반 수급정보시스템이 4월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홍보와 농가의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하며, 기존 농산물 생산 가격정보 제공과 큰 차별성이 없다는 평가가 많음. 실제로 농가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수급조절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현장농가와 공개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공익형직불제 시행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우려가 예견되고 있으며, 경남형 공익형직불제가 차별성을 가지고 농민에게 직접 지원되고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농가직불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평가가 많음. 현재의 마을단위 소액지원사업의 한계를 평가하여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이 공익적 역할에 참여하는 농촌 정주주민에게 실익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운용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경남형 농민수당과 연계 필요)

### ● 미래형 스마트 농업인 육성

- 취농/창업농 육성단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준비기 △취농/창업 초기 △재구조화기 △정착기 등으로 세분화하고, 관련 사업을 육성단계에 따라 체계화해야 함. 이런 육성 체계와 함께 지역단위 청년 농업인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남농업인력 육성 계획'의 수립임. 지역의 농업특성을 반영한 청년농 육성 목표를 지역 단위로 설정하고, 지역 발전에 의미가 있는 청년농을 어떻게 선발·육성·정착시킬 것인지 구체화해야 함
- 경남 푸드플랜 및 그린뉴딜 정책의 틀에서 경남형 스마트팜밸리의 기능과 역할, 지역 연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이 필요함. 각종 시설의 및 청년농촌보금자리 공간 등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과 지역과 공유하는 공간으로 설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미래사회의 혁신적 농촌공간 구성을 지향하는 다각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농어업인과 함께 하는 협치농정 실현**

- 경남 농특위가 출범 1년 6개월이 되었지만 여전히 조레나 운영의 추진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조레 정비, 추진체계(사무국 기능) 구성, 먹거리위원회 연계 주요 농정혁신과제 및 먹거리 과제 재점검, 현장 소통력 강화 등을 위한 실질적 활동이 요구됨
- 21대 국회 농어업회의소 입법화 및 전국 확대의 흐름을 적극 활용하여 시군 농어업회의소 확대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농특위 핵심 과제로 삼고, 직접 현장과 소통하며 설립 지원활동을 진행해야 함. 경상남도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을 위한 시범사업 참여 및 설립 프로세서 마련이 요구됨

● **스마트양식장 조성 및 어촌 6차 산업화**

- **스마트양식장 조성** : 2019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고성군이 선정되어 2019년부터 부지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음. 2020년 6월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으며(용역), 연내 기본계획 승인 후 2021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함. 스마트양식단지 조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경상남도 어업진흥과와 고성군은 ‘스마트양식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2020년 상반기에 자문회의를 1회 개최하고 이를 통해 제기된 자문의견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음
- **패류양식산업 육성** : 거제시 거제항(지방어항) 배후부지에 경상남도의 패류양식산업 육성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친환경 패류양식 연구센터 건립’사업이 2020년 6월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중에 있음. 2021년 완공 및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 : 2019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통영시가 선정되어 현재 1단계 사업이 2021년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1단계 사업은 수산가공 생산실, 임대형 가공공장, 공용 연구지원실 및 전시·홍보·판매장을 겸비한 수산식품 가공 복합기능을 수행할 복합단지를 건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2020년부터 2~3단계 사업인 첨단 가공시설 단지화 및 수산가공 대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함
- **어촌 6차 산업화 사업** : 2019년 통영시, 거제시 어촌 6차 산업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2020년 6월말 남해군 어촌 6차 산업화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예정임. 2021년부터 마을당 15억원 정도를 투입해 1단계 3개 마을, 2단계 4개 마을 등 모두 7개의 어촌 6차 산업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통영시 어촌 6차 산업화 기본계획수립 연구보고서에서 지적된 어촌 6차 산업화 추진 여건상의 불리한 요소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력 지원 및 육성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개별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추진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 총평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과 비상한 상황에 농업과 농촌에 끼친 영향 또한 대단히 충격적이었음. 아울러 새롭게 설계하고 전환해야 하는 과제 또한 행정 및 농촌 현장에서도 속도감 있게 생산됨.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농촌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아울러 농업과 농촌의 다변화를 주도할 농민의 역할과 책무가 그린뉴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가 되었음. 이에 경남의 농정의 틀이 여전히 행정 주도의 다소 경직된 방향제시에 머물러 있으며, ‘특별’하게 운영되어야 할 두 가지 협치기구가 모두 정체해 있음은 대단히 아쉬움
- 민관의 협력과 주도성을 가진 농정거버넌스를 통해 4개년의 주요 정책과 과제를 이상적으로 점검하고 실천하며,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여 농정의 책임자와 수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던 것은 당연한 밑그림이었고 상호의 의지였는데, 도정 2년에 즈음하여 다소 무기력함을 느끼는 부분을 현장에서 상당히 호소하고 있음
- 냉정하게 평가하고 극복할 것과 힘을 실어줄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모든 조건이 변화되고 어려워지는 시절을 함께 맞아야 함. 중앙정부의 농정틀 전환이 다소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하반기 공익형직불제 지급 후 생기는 혼란과 갈등이 예견되기도 함. 경남의 농정추진체계가 선제적으로 소통하고 대응해야 함
- 경상남도는 2020년 5월 섬가꾸기 보좌관을 임명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신규사업에 추가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 신규 제안 과제

-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의 설치** : 경상남도 여성정책 내에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조건의 극복을 위해 다각적인 현안을 다뤄야 하며, 농정국 내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의 기능과 역할이 단순한 여성농업인단체 관리에 머물러 있음. 실제 농촌 거주 농업인 중 남성 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으며(52%) 앞으로 그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 여성농업인의 포괄적 삶의 질 문제와 다양한 여성농업인 배려시책이 빈약함.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의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함(농식품부 및 제주도, 나주시 등 여성농업 전담 부서 설치 및 지자체 확대 추세)
-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 : 2019년 고성군에서 국제멸종위기종인 상괘이를 보호하기 위한 해양생물보호구역을 지정함. 2020년 통영시에서는 잘피(거머리말 등)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을 지정함.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은 경상남도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011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마산만 봉암갯벌 습지보호지역’의 관리기본계획은 2019년 수립이 시작되어 2020년 3월에 발표되었음



- **공익형 수산직불제 촉진 사업** : 2020년 5월부터 수산업·어촌분야에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됨에 따라 ①경영이양직불제, ②수산자원보호직불제, ③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3개 직불금 지급 제도가 신설됨. 경영이양직불제는 만 65세 이상 어업인이 어촌계 계원 자격을 타인에게 이양할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며, 수산자원보호직불제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지원,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는 환경보전 등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2021년 3월 시행 예정이므로 지금부터 경상남도의 공익형 수산직불제 촉진을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되어야 함. 특히, 경영이양직불제의 적용을 통한 어촌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수산자원보호직불제와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는 수산업·어촌 그린뉴딜과 연계해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면밀히 고안할 필요가 있음

## 전략1: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강화와 공공의료체계 혁신

### 추진상황

- 과제19. 교육의 공공성 강화 (2개 세부과제)
  - 실행 (2): ① 교육의 공공성 강화 ② 평생교육·사회교육
- 과제20. 청년이 함께 만드는 청년정책 추진 (3개 세부과제)
  - 실행 (3): ① 청년정책 추진체계 확립 ② 청년 터 조성 ③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확대
- 과제21. 출산·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7개 세부과제)
  - 완료(3) : ① 도지사 직속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위원회 설치 ⑤ 보육료 차액지원 ⑦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 실행 (3) : ② 경남 ‘맘 편한’ 원스톱 보육센터 설치 ④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⑥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및 긴급육아·공공가사도우미 파견
  - 준비(1) : ③ 경남 공공산후조리원 권역별 설치
- 과제22. 지역 공공의료보건 서비스 증진 (8개 세부과제)
  - 실행 (6): ②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④ 경남형 치매관리 책임제 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⑥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⑦ 찾아가는 검진버스 농어촌 순회 무료검진 ⑧ 경남 365 안심병동 확대
  - 착수 (2): ①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확충 ③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과제별 추진 단계	준비	착수	실행	완료
19. 교육의 공공성 강화 (2)			2	
20. 청년이 함께 만드는 청년정책 추진 (1)			3	
21. 출산·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7)	1		3	3
22. 지역 공공의료보건 서비스 증진 (8)		2	6	

### 점검의견

- 교육의 공공성 강화
  - 경상남도는 경남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전 학교 무상급식을 포함한 무상교복, 무상체육복, 무상 수학여행 등 무상교육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 공약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음
  - 현재 실행 2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1년에 전면 무상교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확립

- 청년정책위원회 회의 개최가 연 1~2회 개최에 불과하여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심도 있게 심의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시군 청년 정책에 대한 협조와 지원도 필요하지만 경상남도의 청년정책 개발과 발굴에 중점을 두도록 할 것임
- 청년정책위원회가 경남청년기본조례에 심의 의결기구로 되어 있음. 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나, 초기 단계라 도위주의 청년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향후 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기존 이행과제) : 네트워크 분과회의 개최, 분과별 정책토론회 등 청년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정책 소통창구 마련
- 청년 정책플랫폼 구성(신규 이행과제): 청년 정책 관련부서, 시군, 분야별 청년간 정책 공유 및 실무 조정을 위한 분기별 1회 회의 개최
- 경남 청년추간 행사(신규 이행과제) : 청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소통과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2020년 예산확보 함
- 청년 문제 의제 발굴을 위한 문제해결형 청년정책 플랫폼 개최가 필요함

## ● 청년 터 조성

- 사업 공모 시 청년 인구, 기반시설, 시군의 청년정책 기반, 청년거버넌스 운영여부 등에 대한 가점을 반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시군의 청년터 조성사업은 도내 청년이 많은 시군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성
- 시군 청년터 조성사업 관련 조성부지 및 운영비 예산 확보가 필요함

## ● 출산·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도지사 직속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경남 '맘 편한' 원스톱 보육센터 설치에 기초지자체가 부지 확보 및 사업비 소요 문제로 적극 추진을 하지 않으므로 경상남도가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을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한 타당성과 효용성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 운영 예산 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함. 시설 중심의 복지는 당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소수 여성만 수혜를 받을 수 있음. 찾아가는 공공산후도우미 사업 등으로 전환하여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20년도 계획 대비 추진 실적이 20%에 불과하나,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것으로 보임. 지속적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 권리 교육 등이 요구됨

-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확대 설치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설치 시 지역 영유아 부모의 현황조사 및 수요조사에 기초한 설치가 되어야 할 것임. 공공가사도우미 지원 예산 확보와 지역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자활센터와 연계하여 긴급 육아 도우미 및 공공가사도우미 양성 과정을 지원하여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는 완료되었지만 차후 필터 교환 등의 관리 방안 마련 및 그에 따른 예산 확보 요구됨

## ● 지역 공공의료보건 서비스 증진

-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협의회의 성공적 운영 및 정책 전환
  - 현재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된 공론토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7월 3일 결정될 공론토론 결과를 정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함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과정에서의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서 읍면동에 배치될 간호직 공무원들과 보건소 인력들과의 유기적 연계 필요, 시군, 읍면동 단위의 보건의료인프라 확충과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사업의 체계적 연계 필요

## ■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 총평

- 교육의 공공성 강화
  - 경상남도도는 도청 내 통합교육추진단을 설치하여 도내 교육기관과 협력 체제를 강화해 오고 있음. 이를 통해 학교교육의 기능을 보완하고 도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
  -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학교 급식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함
  -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 교육 단계에서의 가정 환경별 교육격차는 교육 불평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 이 단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건강은 물론 정서적 교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복지 제공 및 부모 교육 등 체계적인 돌봄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청년정책 추진체계 확립
  - 시군 참여 및 교류 확산
  - 시군별 「청년 발전 기본조례」 제정 및 청년네트워크 구성
  - 도⇄시군 청년 네트워크와 교류활동 추진 협조 등
  - 청년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선정 및 시행이 필요함
  - 청년정책플랫폼 구성, 모여라 경남청년 축제(박람회, 토론회 등) 개최

- 청년정책 초기 단계라서 도 위주의 청년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 향후 청년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임.
- 청년 터 조성
  - 청년터 조성을 위한 유희 공간 및 운영비 예산 확보(시군)가 요구되며, 청년센터는 운영 위탁(경남연구원)
  - 도시지역과 달리 군지역에서는 청년 인구가 적어 청년터 조성사업 추진에 상대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현재 5개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청년이 많은 시군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청년 터 조성사업을 생활SOC 사업대상 시설에 포함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할 필요가 있음
  - 기 추진 중인 청년 터 조성사업의 연계성을 고려, 청년터를 복합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도에서 청년터(북카페, 회의실, 상담실, 문화공간 등)에 대한 몇가지 모델을 개발하여 시군과 협의하여 유치방안 강구
  - 생활SOC 활용하여 추진할 경우 청년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노인,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될 수 있으면 좋겠고, 청년복합센터가 사회혁신의 허브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조성되었으면 함.
  - 시군 참여 및 교류 확산 등 청년감수성 제고를 위한 시군별 ‘청년 기본 조례’ 제정과 청년정책 공유를 위한 청년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함.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확대
  - 경남형 청년세어하우스(거북이집 1호) 7가구 보급 후 2, 3호 기획 준비 중으로 순항 중. 20년 신혼희망타운 1,448가구 사업 추진 중이나, 주택시장 침체로 미분양 우려가 크므로 특별공급 방법 및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민간건설업체 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
  - 현실적 어려움이 많지만 초기 계획하였던 노-노, 노-청 주택에 대한 시도도 지속해 주기 바람(창원 완월 달빛주택 : 노-노, 노-청 주택 기 구현함)
- mampan 원스톱 보육센터 설치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 우선 설치한 기관의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타당성 검토 후 순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민간 산후조리원의 가동률이 낮은 상태에서 공공산후 조리원 설치 시 민간 영역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그에 따른 방안 마련이 필요함. 유지 가능하고 유연성 있는 대처가 가능한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에 앞서 현황 조사를 통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의 전환 검토 또는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이 주도하여 찾아가는 산후조리 서비스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은 지역의 요구도를 바탕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공립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아동 권리 교육 등 강화 필요
- 공공가사도우미 서비스는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신규 제안 과제

### - 경남주거복지센터 설립

- 최근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잇달아 내놓으며 2025년까지 장기임대주택 240만 채를 공급하기로 함. 또한 청년 100만 가구, 신혼부부 120만 가구, 고령자와 일반·저소득층 460만 가구 등 총 70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임
- 경남에서도 청년더불어주택 38가구, 신혼희망타운 2,062가구 등 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도정4개년계획 이행과제 II-1-20-③)
- 문제는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정작 대상자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용률이 매우 낮다는 점임. 한국주거복지연구원이 2019년 11월 공개한 보고서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1만2,954명 가운데 정부의 주요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대부분의 항목에서 50%를 넘지 못함
-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2017년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주거복지 전달 시스템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주거복지센터)도 전담 조직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음
- 하지만 전체 40개의 주거복지센터가 수도권에만 80%에 육박하는 31개가 몰려 있으며, 경남에는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경남에서도 「경남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임대 주거단지에 「주거복지사」 배치를 의무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경상남도의 조례 제정이 시급함

### - 경남아동권리보장원 설립

-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에서 9세 아이 2명이 참담한 아동학대를 당하는 사고가 일어남. 천안에서는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7시간을 갇힌 A군이 숨졌고, 창녕에서는 집에서 목줄을 끈 B양이 빌라 4층 지붕을 타고 옆집 베란다로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음
-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3, 4월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9%, 17.2% 감소하였으나,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과 가정교육이 이루어져 신고 의무자인 교사 등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과 직접 대면할 기회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며, 전체 아동학대의 80%는 가정내에서 발생하고 있음
- 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잔혹성으로 심각성이 재차 환기되고 있지만, 아동학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2008년 5,578건에서 2018년 2만3,169건으로 4배 이상 급증하였음
- 이에 법무부는 민법에서 부모의 아동 징계권 조항 삭제를 추진하는 등 더욱 강력한 아동학대 예방책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10월부터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작년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설치하여, 아동학대 등 공공과 민간에 위탁했던 8개 아동복지 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경남에서도 아동의 권리보호 등 아동복지 지원사업을 통합 운영할 「경남아동 권리보장원」의 설립과 함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배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경상남도 보건당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 도민건강국 설치
  - 신종감염병 등 감염병 관리를 위한 전담 과 설치 및 현재 복지 관련 과에 흩어져 있는 노인 및 장애인 건강관리 및 재활, 치매 및 모자의료 관련 부서를 통합
  - 현재의 복지보건국을 도민건강국과 복지국으로 나누고 도민건강국을 보건행정과, 식품의약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정책과로 구성
- 경남건강재단 설립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지원단, 감염병관리지원단, 광역정신보건복지센터 간 통합을 통한 경남건강재단 설립을 통하여 건강 및 보건의료 영역의 안정적인 정책 및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
- 경남정신사회재활센터 설립
  - 경남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직업재활을 통하여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기관

## 전략 2: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 실현

### 추진상황

- 과제23. 노동자 권익 보호 (8개 세부과제)
  - 완료 (5): ① 노동전담부서 설치 및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②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④ 감정노동자 상담센터 설치 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⑦ 생활임금
  - 실행 (2): ⑥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⑧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 착수 (1): ③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 과제24.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2개 세부과제)
  - 실행 (2) : ①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② 젠더폭력방지 기반 구축(#with you 경남)
- 과제25. 장애인 인권보장 및 자립기반 강화 (2개 세부과제)
  - 완료 (1) : 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 실행 (1) : ①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우선구매 활성화
- 과제26.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4개 세부과제)
  - 완료 (1): ④ 원스톱 복지전달체계 구축
  - 실행 (3): ① 임플란트·틀니, 관절수술,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지원 ② 어르신센터 설치 ③ 새로운 복지전달체계 찾아가는 복지센터

과제별 추진 단계	준비	착수	실행	완료
23. 노동자 권익 보호 (8)		1	2	5
24.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2)			2	
25. 장애인 인권보장 및 자립기반 강화 (2)			1	1
26.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4)			3	1

### 점검의견

- 노동자 권익 보호
  - 노동정책 개발을 위한 노동전담부서가 신속하게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아직 초기 단계라 관련 조례 정비,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감정노동자 상담센터 설치,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등의 지원시설 확충에 치중해 온 감이 짝으나, 이들 제도나 시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내실화를 기하고, 정책역량을 강화해 가는 노력이 요구됨. 특히 불가피한 시행착오에 대한 성찰과 수범사례의 발굴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각 사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권고함
-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 각 위원회 여성참여율이 37%로 목표를 달성하기는 하였으나, 양성평등기본법에 위원회의 구성에 어느 한 성이 40%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지속적인 여성 위원 참여 확대가 필요함



- 양성평등교육의 효과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 대학생, 군인 등 교육 대상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18개 시군에 With you 지킴이단은 구성되었으나 이들이 실제로 지킴이단 활동을 위해서는 이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므로 이들 대상의 젠더폭력 방지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요함

####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인권조례 제정 및 연구용역 의뢰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타당함
- 향후 제정된 인권조례 및 연구용역결과를 기반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이 실현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정책으로 발굴해야 할 것임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실행과정에는 장애인단체 뿐만 아니라 관련 복지현장,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

#### ●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우선구매 활성화

- 2008.9.22.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경상남도 의무구매율 1% 달성한 것으로 김경수 도정의 성과로 평가됨
- 다만 18개 시군 평균 우선구매율은 0.49%로 의무구매율 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시군의 의무구매율을 이행하기 위한 각별한 정책이 필요함
- 매년 4월경 보건복지부는 전국 공공기관 우선구매율을 발표하므로 2020년도 역시 경상남도는 물론 시군 의무구매율이 달성되도록 노력이 필요함
-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율은 경상남도 내 수많은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최우선과제이므로 항상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 임플란트·틀니, 관절 수술비 지원은 추진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적이 저조하며, 대상포진예방접종 비용지원은 비용대비 낮은 효과로 잠정보류 되고 있음
- 어르신센터 설치사업은 센터의 기능과 사업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량을 재조정 하여야 함
-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충과 함께 간호직 공무원의 충원도 이루어져야 함
-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 복지전달체계 구축은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함

## ■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 총평

- 코로나19 감염병이 몰고온 경제적 위기는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나 수단이 취약한 노동자들의 문제를 부각시켰고, 특히 4인 이하 영세업체 종사자 또는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제기했음. 중앙정부가 방기하고 있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노동자 권익보호를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은 전반적으로 계획 대비 충실하게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진 경남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인구, 복지 등 모든 정책 분야에 성인지적 관점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도지사를 비롯한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고위 공무원에 대한 젠더 교육과 워크숍이 필요함
- 전체적으로 26. 과제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과제명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지원 및 새로운 복지행정체계 구축’으로 변경하여, 과제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함
- 과제 ③ 찾아가는 복지센터, ④ 원스톱 복지전달체계는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여성가족재단이 실질적으로 성평등 정책 제안과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역 성평등 지수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재단의 경우 재단 설립으로 이행률 100% 달성. 과제 설정이나 재단 원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예를 들면 성평등 지수 개선을 위한 정책과 사업 등)과 집행기구가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역할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성인지 감수성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여 단발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심화 과정 등을 개설할 필요가 있음
- 어르신센터의 확대 설치에 ‘어르신센터 운영모형 연구’를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등 전문연구기관의 위탁연구를 실시하고,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새로운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원스톱 복지전달체계 구축은 현재 6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계모형 연구’를 실시한 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젠더정책 담당관제 실시 필요
-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 보건복지부는 최근 사회복지시설 운영평가에서 2015년에 이어 2018년에도 ‘F등급’을 받은 35개 시설의 명단을 발표하였음
  - ‘F등급’을 받은 전국 35개 사회복지시설 중 경남은 14개(노인복지관 4개, 사회복지관 10개)로, 전체의 40%를 차지함
  - 14개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로,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낮고, 프로그램 제공 등의 업무보다는 지자체 행사장 대여 등 단순 시설관리 업무에 치중하기 때문’으로 추정됨
  - 따라서 이들 14개 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전문기관 위탁운영이나 컨설팅 등 운영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

## 전략3: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 추진상황

- 과제27. 최적의 대기질 관리 (3개 세부과제)
  - 실행 (3): ①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운영, ② 도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기질 관리 ③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과제28. 낙동강 수질개선 (1개 세부과제)
  - 실행 (1): ① 낙동강 수질개선
- 과제29. 에너지 전환사회 구현 (2개 세부과제)
  - 실행 (2): ① 에너지 전환사회 구현 ② 수소사회 실현 기반 구축

과제별 추진 단계	준비	착수	실행	완료
27. 최적의 대기질 관리 (3)			3	
28. 낙동강 수질개선 (1)			1	
29. 에너지 전환사회 구현 (2)			2	

### 점검의견

- 대기측정망 확충 및 대기질관리
  - 대기오염측정망 조기확충이 필요하며, 대기오염측정망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구축이 필요함
  - 각 지자체에 미세먼지 조례 확대를 행정지도하며, 향후, 시행될 대기오염총량제에 대비한 면오염원과 선오염원에 대한 기초조사사업 등이 필요함
- 친환경차 보급확대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친환경차 보급확대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실질적인 지원과 유관부서 협조를 통해 타 시·도보다 선제적인 친환경차 인프라 조기구축 사업 추진이 필요함
- 낙동강 수질개선
  - 지속적인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개선사업이 필요하며, 낙동강 난분해성 오염물질 개선을 위한 기초조사사업과 개선방안이 필요함
  - 낙동강 보 개방에 따른 수질변화와 시설 가동 상황 등에 대한 대책방안이 필요함
- 에너지 전환사회 구현 및 수소사회 실현 기반 구축
  - 에너지 전환사회 구현은 그린뉴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을 구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수소사회 실현 기반 구축

- 유관기관 협업과 산·학·연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선도적인 기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함

## ■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총평

- 최적의 대기질관리를 위해 그동안 경상남도는 많은 과제들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낙동강 수질개선은 다른 시·도와 광역권으로 접근해야만 하는 과제로 어려움이 있으나, 보개방과 녹조문제, 취수원 다변화 문제, 낙동강 미량유해물질 등 많은 난제들이 있음에도 이전보다는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에너지 전환사회 구현과 수소사회 실현 구축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과 4차산업혁명과도 연계된 과제로서 국가의 뉴딜사업과 그중에서도 그린뉴딜사업과 직결되므로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선도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
- 대기오염총량제에 대비한 면오염원과 선오염원에 대한 기초조사사업 등이 필요함
- 낙동강 난분해성 미량유해 물질에 대한 저감을 위한 경상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이 필요함

## 전략4: 함께 누리는 문화생태계 조성

### 추진상황

- 과제30. 도민 문화예술 향유기획 확대 및 창작환경 개선 (7개 세부과제)
  - 완료 (4) : ① 문화예술협치위원회 구성 및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기능 정상화 ② 경남도립예술단 창단 ③ 경남예술인 그라민 금고 설치 ④ 예술인복지센터 설립 및 예술인 복지조례 제정
  - 실행 (3) : ①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지원 ② 경남정신 확립 ③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및 지원조례 제정
- 과제31. 생활속에 함께 누리는 체육기반 확충 (4개 세부과제)
  - 완료 (1) : ① 창원마산야구장 조기 건립 지원
  - 실행 (3) : 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② 장애인체육관 건립 및 이동약자 체육 편의시설 확충 ③ 생활체육 활성화
- 과제32. 모두가 찾고 싶은 힐링관광 조성 (2개 세부과제)
  - 실행 (2) : ① 힐링 휴양관광 상품개발 및 남해안 도보여행길 조성 ② 열린관광 1번가 조성

과제별 추진 단계	준비	착수	실행	완료
30. 도민 문화예술 향유기획 확대 및 창작환경 개선 (7)			3	4
31. 생활속에 함께 누리는 체육기반 확충 (4)			3	1
32. 모두가 찾고 싶은 힐링관광 조성 (2)			2	

### 점검의견

- 도민 문화예술 향유기획 확대 및 창작환경 개선
  - '19년 문화예술협치위원회가 구성되고 문화정책, 예술복지, 문화산업,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부분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개최 실적 없음. 서면, 화상회의 등 비대면방식을 활용 포스트코로나 문화정책 발굴 및 협의 필요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기능정상화에서 최초 문화재단과 콘텐츠기업육성센터는 분리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는데, 진행상황에 대한 확인 필요(두 기관의 역할 상이성 등으로 국내 공동운영기관은 거의 없음)
  - 경남 콘텐츠기업육성센터가 조성되었으나('20.5.26) 향후 경남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 및 전략, 특화부분 설정이 보다 명확해야 함. 경남 콘텐츠산업 육성 로드맵 확인 필요.

- 경남도립극단이 준비되고 있고 9월 창립공연 및 순회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임. 경남도립예술단의 취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남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소외 최소화, 대내외적으로 경남예술의 위상강화 등인데 향후 도립극단 운영시 얼마나 많은 도민에게 이 혜택을 누리게 할 것인지, 대내외적으로 경남예술의 위상을 어떻게 신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필요. 특히 기존 경남도민예술단과의 차별화 확보 요망.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지원에 대한 '20년 진행상황이 전무함. 코로나 19로 인한 문화예술종사자의 어려움이 가장 큰 현시점 사회적경제를 통한 다양한 지원방안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3년 개관예정인 가야문화권의 컨트롤타워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와 기존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경남 역사문화센터와의 관계설정 및 기능분담에 대한 검토 필요

#### ● 생활속에 함께 누리는 체육기반 조성

- 장애인 체육회 설립 시군 참여 저조에 따른 홍보방안 강구가 '19년부터 지속적인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후 이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 방안 강구 필요.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가 '18년 대비 13명이 증가하였고, 생활체육교실도 7개소가 증가하였는데 이에 따른 지도자, 참가자의 만족도는 어떤지 정책효과 확인 필요
- 도정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방문스포츠팀유치지원센터는 경남스포츠산업육성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국비 공모사업과 병행한 경남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사업효과 등을 감안하면 타당하다고 판단됨

#### ● 모두가 찾고 싶은 힐링관광 조성

- 포스트코로나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전망되고 있는 웰리스, 힐링 휴양관광상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업발굴이 필요하고, 유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방향노화산업과, 경남향노화주식회사와의 협업이 중요함
- 향후 남해안 도보여행길 7개 코스(창원 공정여행, 토영 남피랑길 걷기여행 등) 등 현재 관광트렌드인 안전, 청정, 아웃도어, 비대면 등이 가능한 관광상품을 적극홍보하며, 이후 AR, VR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정보 및 홍보마케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경남관광재단 설립 후 코로나19로 인한 경남 관광산업을 재생 및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노력 필요. 특히, 재난, 감염병, 북핵위기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상당한 타격을 받는 관광산업의 피해 구제를 위한 지역 차원의 '관광기금 조성' 등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 마을단위 관광활성화가 최근 전반적인 추세이고, 향후 지역관광경쟁력의 주요한 요인임을 감안할 때 관광협동조합 개소수 증대 요망

## ■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 총평

- 전반적으로 과제 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 다만, 함께 누리는 문화생태계 조성이 문화, 체육, 관광 등 분야를 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추진주체간에 협력과 연계가 기반되지 않으면 자생력있는 문화생태계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임. 경남관광재단의 설립이 마무리 되고 있기 때문에 경남관광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항노화주식회사 등 세 기관간의 적극적인 협력 사업추진이 더욱 필요한 때임
- 특히 각 과제의 최종 목표가 단순한 과제 달성보다는 그 목표달성을 통해 얻게 되는 편익의 확대에 더욱 비중을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조사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예를들면 경남도립극단의 정책성과를 단순 개최횟수가 아닌 관람객 수, 만족도 등의 조사로 확인해야 할 것임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계유산등재, 가야사 정립 및 활용 등 정책추진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되었는데,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 세밀하게 검토하여 제안하고, 특별법 성과를 경남도민이 피부에 와 닿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추진 필요

### ● 신규 제안 과제

- ‘코로나19 대응 경남 축제·전시·이벤트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 취소축제의 내년 행사 대행사 및 참여업체 先 선정 및 예산 집행
  - 현재 상반기에 개최예정이던 축제, 전시·이벤트 등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된 상태이고 연기된 것은 하반기에 개최예정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관계업체는 대부분 영세하고 지역경제와의 밀착성도 굉장히 높아 만약 하반기 행사도 취소된다면 폐업 등 상당한 타격이 예상됨
  - 이에 따라 규모의 최소화, 온라인병행, 예약제 도입 등 ‘코로나19 대응 경남 축제·전시·이벤트 안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가능하면 예산이 배정된 행사는 추진하는 방안 모색. 다만, 엑스포 등 대규모 행사는 그 행사의 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으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안전 등 제반여건상 개최할 수 없는 행사는 내년 행사대행사 및 참여업체를 미리 선정하여 예산을 선 집행함으로써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이행지급 보증보험 가입 증서 제출, 서양서 작성 등을 통한 선지급)

- 온라인 문화관광상품 비즈니스 플랫폼 개발

- 코로나 19에 따라 문화예술 랜선공연, 관광지 및 시설 VR관람 등 온라인 문화관광 상품 운영 및 홍보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경남에서도 추진되고 있으나 대체로 무료임. 향후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경남 문화관광 비즈니스 플랫폼을 개발하여 공연, 전시, 랜선투어, MICE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으로 관련 업체 수익증대 기여

- 서부경남 콘텐츠 지원센터 설립

- 현재 대부분의 콘텐츠관련 기관 및 시설이 창원, 김해 등에 위치하고 있어, 역사문화와 자연환경 콘텐츠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서부경남의 콘텐츠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김해 콘텐츠기업 지원센터 및 창원 콘텐츠코리아랩 의 서부경남지소(진주 등) 개발 등 서부경남 콘텐츠 육성을 위한 거점기관 및 시설 검토 요망

-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문화영화제 개최

- 영화산업은 제조업 보다 고용창출능력이 높다고 분석되는데도, 경남의 영화산업 지원 현실은 열악한 실정으로 영상영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 경남은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으로 MAMF 축제와 부산 국제영화제와 연계한 다문화 영화제 개최에 대한 필요성 검토 요망



## 전략5: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조성

### 추진상황

- 과제33.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활력 제고 (1개 세부과제)
  - 실행 (1): ① 도시재생 활성화
- 과제34. 유니버설 디자인도시 구현 (2개 세부과제)
  - 실행 (2): ①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구현 ② 저상버스 보급 확대
- 과제35. 수요자중심 광역교통체계 확충 (3개 세부과제)
  - 완료 (1): ② 브라보 100원 택시
  - 실행 (3): ① 광역교통체계 확충 ③ 남해안 고속화철도 조기 개통
- 과제36.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체계 강화 (4개 세부과제)
  - 실행 (4): ①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및 안전감시단 도입 ② 스마트 지진방재 시스템 강화 ③ 화재방재 대비시스템 강화 ④ 학교건물 내진보강 및 스프링클러 설치

과제별 추진 단계	준비	착수	실행	완료
33.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활력 제고 (1)			1	
34.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구현 (2)			2	
35. 수요자 중심 광역교통체계 구축 (3)			2	1
36. 자연 및 사회재난 예방·대응 체계 강화 (4)			4	

### 점검의견

-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활력 제고
  - 공공건축가 제도와 도시재생 사업 협력 현황 별도 점검 필요
  - 경상남도 도시재생센터 :가장 중요한 ‘중간지원(활동가) 인력양성사업’ 예산 5천만원 삭감으로 인한 대책 시급
  - 공공문화시설 공사비의 5~10%를 향후 5-10년간 공공건축 운영 문화프로그램에 할애하는 ‘공공문화시설 프로그램개발경비 할당제’ 재검토 요
  - 공공건축 담장허물기, 로비 및 외부와 옥상공간 시민개방 요 - 현재 교육청 공간만 추진중. 경상남도 공공기관도 시범사업 필요(경남연구원에서 공공건축 공개공간에 관한 실태조사 수행(2019. 10, 도청건너편 공공건축 밀집지) - 정부의 그린뉴딜정책과 매칭 요

- 공공건축 주차장 공동관리(일례로 가야연구소 주차장은 비어있는데 경남연구원은 부족) 필요, 창원시에서 진행중인 사업과 별도로 정부의 그린뉴딜정책과 매칭하여 도 시범 사업 필요
- 도시재생의 하드웨어 평가를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불량경관 양호경관 감시 사이트’ 개설 요
- 2020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2억원 지원(18년 제주 예산의 1/2수준). 졸속 진행 우려. 다각도 지원 필요

#### ●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구현

-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란 궁극적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이동약자는 물론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과 무관하게 모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도시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디자인구조를 구현하는 것임
- 따라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관련조례 제정’, ‘용역보고’ 등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이를 통해 실제 모든 도시 시설물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행 정책의 발굴이 필요함.
- 향후 본 조례 및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시설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됨

#### ● 저상버스 보급 확대

- 저상버스는 장애인뿐 만 아니라 어르신, 임산부, 어린아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중교통수단이므로 확대 보급이 시급함
- 영국 런던, 덴마크 코펜하겐 등 유럽에서는 2000년대부터 저상버스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가 보편화 되고 있음
- 경상남도도 대중교통 이용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대부분 거동불편 장애인, 노쇠하신 어르신, 신체조건이 미숙한 어린 아이, 임산부임을 감안할 때 저상버스가 보급이 필수적임
- 특히, 저상버스는 바닥 높이가 30cm이하로 승강장 턱 높이가 이에 맞게 설치되어야 할 것임. 승강장 시설조건 및 저상버스 정차시 휠체어 이용 장애인, 유모차, 어르신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임

#### ● 수요자중심 광역교통체계 구축

- 부울경 협의체 노력 계속 필요.
- 경남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국토교통부 예산 지원 절실(수도권 광역전철 구축비의 80% 가량이 균형발전예산에서 집행되는 등 파행), 노력 지속 요
- 지자체간 광역교통망 구축에 박차 요(환승할인 김해-창원(19하반기 시행), 진주-사천 구축중, 통영-거제, 마산-함안 등 조기 검토필요) / 기존의 김해-부산, 부산-양산은 확충 / 거제-부산간 광역교통은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정책 수행 요, 노력 지속 요
- 각 지자체의 버스 준공영제 실현에 대한 도의 협조 필요 - 선 광역간 노선 조정 필요

## ■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 총평

- 하드웨어 지양 소프트웨어 강화라는 큰 틀 속에서 편리함, 안전함을 담보하며 무난 진행중
- 고속화철도연계 교통체계와 지자체간 광역교통망, 전라남도 연계고속철에 대한 균형발전 예산 확보 등 정부대응 공동노력 계속 요
- 총체적이고 상징적인 공간조성 및 건축모형 전시와 컨트롤 타워로서 국립남부 건축·디자인센터 구축 절실
- 도시재생 건물 설계비 현실화 절실. 21년부터 도시재생의 물리적 결과물(센터, 주민 커뮤니티, 플랫폼 등)이 쏟아지는데 10억원 건물의 설계비를 2천만원 최저가 입찰하는 등의 문제 여러 곳에서 발생. 최악의 결과 우려됨. 설계비 2천만원~1억원 사이의 소규모 공공건물에 신축과 재생에 대한 대책 시급
-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 품질검수단 서비스 필요(전수조사 불요, 현재 30년 이상 주택만 시행중), 도민들이 원하는 경우에만(예산 절감 가능, 상반기 점검사항 반영 미흡)
- 국립 남부 건축 · 디자인센터 구축 계속 노력 요. 선진사례처럼 건축모형, 구조물, 아카이브 등을 전시하고 보관할 공간 필요. 비접촉식 공간과 행태에 대한 총체적 공간연구 병행
- ‘18시간 공공(체육)시설 운영’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17시간 시범 운영’ 후 판단, 혹은 수요조사라도 시도하기를 권장

### ● 신규 제안 과제

- **경상남도 빈집뱅크 신설 및 운영**(사례 : 일본 도치기현 아키야 뱅크, 정선 고한읍 마을호텔, 토시마 리노베이션 스쿨, 부산 봉산마을 빈집해결 시민건축학교) : 빈집뱅크의 운영은 경상남도가 주관하며, 빈집의 소유자와 구매자 혹은 임차인을 연결해주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 추후 별도 빈집은행 제도도입
- **소규모 공공건축물 간이설계공모 도입** :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사업 공모 시 설계도면이나 스케치 이외 제출물을 요구하지 않는 간이공모 도입
- **지역 커뮤니티시설의 임시주거 및 무더위쉼터 기능 강화** : 폭염, 강풍, 집중호우, 지진, 전염병 등에 강한 지역 커뮤니티하우스 도입
- **건축문화 아카이브 관리·운영 고도화** : 기 구축한 근대건축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의 후속 관리·운영 필요 : 2015년 전수조사 및 지도 구축 이후 건축자산에 대한 자료 제보, 멸실 관계 파악 등 후속 관리 노력 요. 한옥, 현대건축물 등도 통합관리 필요. 건축문화 관련 활용 및 홍보 플랫폼 일원화 필요
- **도민 체감 생활경관 관리사업 추진** : 과도하게 설치된 조형물 및 시설물, 관리되지 않아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 불법 적치물 등 정비(사례 : 서울 도시비우기 사업)

## 전략1: 참여 민주주의 확대로 만드는 사회혁신

### 추진상황

- 과제37. 대의민주주의 제도 보완 (1개 세부과제)
  - 준비 (1): ① 대의민주주의 제도 보완
- 과제38.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활성화 (3개 세부과제)
  - 완료 (1): ① 주민참여예산제
  - 실행 (2): ② 도민참여 활성화 협치 ③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도민 감사참여 활성화
- 과제39. 도민정책참여 플랫폼 마련 (3개 세부 과제)
  - 완료 (1): ③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확대
  - 실행 (1): ① 뉴미디어 도민 참여 확대
  - 준비 (1): ② 도민과 함께 서부청사 행복화원 조성

과제별 추진 단계	준비	착수	실행	완료
37. 대의민주주의 제도 보완(1)	1			
38.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활성화(3)			2	1
39. 도민정책참여 플랫폼 마련(3)	1		1	1

### 점검의견

- 대의민주주의 제도 보완
  - 관련법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제20대 국회 자동 폐기되어 제21대 국회에서 개정된 이후 조례 제개정 추진
  - 한편 법령의 개정 시 신속한 조례 개정을 위한 최대한 청구요건 등을 완화하고, 도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가능토록 조례 개정(안)의 준비가 필요함
-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제는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 한편 공모 방식을 뛰어넘어 주민들이 민주적인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계획하는 방식도 필요함. 아울러 사회 혁신 요소를 강화하고 제도에 대한 교육, 연구 필요.
  - 고성읍장 내부 공모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타 시군에 확산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함. 특히, 도지사가 주관하는 시군단체장 협의회 또는 워크숍 활용하여 유도

- 감사위원회 추진 일정이 늦어진 것은 위원회 내의 실무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위해 행안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 늦어진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함

#### ● 도민정책 참여 플랫폼 마련

- 도정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홍보 채널을 운영하는 노력은 바람직하나 일부 방식은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선택과 집중을 고민할 필요 있음. 아울러 도민들의 참여를 더욱 유도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방식을 모색해야 함
- 서부청사 행복화원 조성은 시급성에서 밀려 2020년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음. 2021년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타당성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도민 반응이 긍정적이므로 검수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확대, 전담 인력 보강의 필요가 있으며 LH와 협력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 총평

- 대의민주주의 보완과 도민 참여 활성화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과제이므로 경상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음(퍼실리테이터 방식도 활용)
- 주민참여예산제는 성과도 좋고 주민 호응도 좋으므로 조직과 예산 규모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공모 방식 극복 위해 주민 연구 제안사업 시도 필요함
- 도정 홍보를 위한 SNS 활용은 이용자인 도민들의 참여 확대 및 이용도 제고를 위한 고민이 필요함
- 서부청사 행복화원 조성은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와 실현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규모와 기능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직 사회 인식 확대와 변화를 위해 시장·군수와 예산담당 공무원들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중요성 강조와 국내외 선진 사례들의 소개 등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 신규 제안 과제

- **대의민주주의 제도 보완,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제도** : 경남남도민의 도정 참여에 관한 기본조례인 가칭 ‘경상남도 주민참여조례’, 시군에 ‘민주시민교육조례’, 경상남도교육청의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의 제정을 제안함. 이를 위해서는 경상남도 조례의 전반에 대한 점검과 타 시도의 조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필요시 경남연구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 고려)
- **공동체 활성화 위한 사업 추진 제안** : 코로나19 등 효과적인 방역과 재난 대응 그리고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서 아파트공동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활동가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략2: 협력과 갈등관리의 협치 체계 구축

### 추진상황

- 과제40. 도의회와 협치 시스템 구축 (1개 세부과제)
  - 실행 (1): ① 도의회와 협치 시스템 구축
- 과제41. 통합행정체제 구축 (2개 세부과제)
  - 완료 (1): ① 통합교육행정체제 구축(공약: 교육행정협의회 기능 실질화)
  - 실행 (1): ② 중앙정부 소속기관과 협력
- 과제42. 지방정부 협력 네트워크 강화 (1개 세부과제)
  - 실행 (1): ① 지방정부 협력 네트워크 강화

과제별 추진 단계	준비	착수	실행	완료
40. 도의회와 협치시스템 구축(1개 세부과제)			1	
41. 통합교육행정체제 구축(2개 세부과제)			1	1
42. 지방정부 협력 네트워크 강화(1개 과제)			1	

### 점검의견

- 도의회와 협치 시스템 구축
  - 도의회와 협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만남의 장이 제도화되고 있으나 협치의 내실화를 위한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통합행정체제 구축
  - 교육행정협의회 내실화를 위해서는 6월~9월에 집중하고 있는 회의 시기의 변경이 필요하며 통합교육행정체제, 통합교육추진단, 경남형 아이돌봄개발협의회, 경남형 학교공간혁신위원회 등 혁신적인 시도들이 잘 정착하도록 해야 함
  - 코로나19 이후 초·중·고의 등교수업이 차질 없이 진행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협의회의 운영을 계속해야 한다고 판단됨
  - 경상남도·중앙정부 소속기관 정책협력협의회에 23개 기관 중 19개 기관이 참여 의사가 있는 것을 잘 활용하여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야함

## ● 지방정부 협력네트워크 강화

- 경남, 부산, 울산 세 광역자치체가 대상인 동남권 상생발전 협의회, 경남, 부산, 전남이 참여하는 남해안권, 경남과 서울 간의 협력, 김해와 영등포구 급식 협력 등은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광역 정부 사이에 이루어진 성과가 경상남도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임. 도-시·군 간의 행정협력이 단계적 진전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 성과를 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므로 실질적인 교류와 도-시·군 간 적극적 협력행정을 통하여 소통과 상생협력에 있어서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 총평

- 집행부와 도의회 간의 협치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도의회에 전문위원 등의 전문가들의 참여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인사에서 도청과 달리 도의회가 독립할 필요가 있음(국회와 같이). 사안에 따라 집행부와 도의회, 도정자문위원회 등 민간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방안 검토
- 통합교육행정체제 구축과제 완료 이후 실질적 체제 운영 성과를 위한 후속 목표 및 과제가 필요함
- 중앙정부 소속기관 협력 과제는 지속과제로써, 연간 구체적인 목표설정을 통하여 과제 이행 및 성과를 진단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언제든지 비대면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예를 들어 에듀테크 등과 같은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함. 이런 시스템 도입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가 상호 협력, 준비할 필요가 있음. 일반 행정 협력만 아니라 교육과 같은 전문 분야도 행정과 협력하는 것임
- 경남, 부산, 울산, 전남, 서울 등 광역과 광역, 경상남도 내의 기초와 기초, 타 광역도의 기초와 경남의 기초 등이 공동사무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전략3: 공무원의 자율로 만드는 행정혁신

### 추진상황

- 과제43. 정보공개, 자원 공유로 열린 도정 실현 (1개 세부과제)
  - 실행 (1) : ① 정보공개, 자원공유로 열린 도정 실현
- 과제44. 도민 중심의 규제 혁파와 민원 개선 (4개 세부과제)
  - 완료 (2) : ② 민자도로 신용카드 결제 ④ 서부청사 민원해결
  - 실행 (2) : ① 빅데이터를 이용 민원·복지 분석 및 활용 ③ 민생규제 혁신과제와 지역 맞춤형 과제 발굴
- 과제45. 적소 적재의 인사혁신과 칸막이 없는 행정 (2개 세부과제)
  - 실행 (2) : ① 적소적재 인사혁신 ② 성과관리 프로세스 정착 및 운영 패러다임 전환
- 과제46. 공직생활이 즐거운 공무원 (1개 세부과제)
  - 실행 (1) : 공직생활이 즐거운 공무원

과제별 추진 단계	준비	착수	실행	완료
43. 정보공개, 자원 공유로 열린 도정 실현 (1)			1	
44. 도민 중심의 규제 혁파와 민원 개선 (4)			2	2
45. 적소 적재의 인사혁신과 칸막이 없는 행정 (2)			2	
46. 공직생활이 즐거운 공무원 (1)			1	

### 점검의견

- 정보공개, 자원공유로 열린 도정 실현
  - 공공 정보 개방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한 확대가 필요함. 경상남도가 실시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공공 데이터 개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12.8%, ‘경상남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는 22.9%인 것은 이에 대한 반증임
  - 경상남도 공공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홈페이지에 일부 위원회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음. 위원회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 도민 중심의 규제 혁파와 민원 개선
  - 빅데이터 형성을 위하여 기존의 데이터를 과감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 결과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19년에는 개방형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예산이 474백만 원 미집행 되었고, 20년에는 개방형 공공플랫폼 구축 예산이 없는 것은 아쉬움



- **적소 적재의 인사혁신과 칸막이 없는 행정**

- 성과 관리, 지표에서는 공직 사회의 반응과 피드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소통과 협치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렬별 원탁 토론(퍼실리테이터)의 실시 권장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이후 행정의 조직 변화의 필요성이 드러났음. 재택근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근무 환경 등이 필요하며 이에 맞는 역량 강화가 필요함

- **공직생활이 즐거운 공무원**

- 유연근무제로 인한 다양한 공무원 신분(정규직, 시간제, 무기계약제, 육아휴직대체인력 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공직생활에 대한 기준과 함께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함
- 2019년 정부에서 공개한 혁신관련 사례집과 자료를 모두 확인하였으나 경상남도의 내용은 거의 없었음. 혁신 사례에 대해 질적인 내용 중심의 스토리텔링 자료집 혹은 이를 통한 참여 홍보가 필요함
- 공직 생활의 ‘즐거움’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나아지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총평**

- 공무원의 자율로 이루어지는 행정혁신은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도민, 당사자들과 소통, 거버넌스가 부족한 것은 공무원들이 과제의 목적에 대한 인식과 깊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 중요성 인식 필요함
- 조직구성원의 기본적인 역량강화 학습 및 민주적 의사소통 교육을 통해 혁신적인 조직문화가 정착되면서 변화되어야 한다고 봄
- 디지털 전환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공직 전 구성원의 혁신역량 동기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의 디지털 교육을 통한 마인드 변화와 역량강화 필요함(예로, 클라우드 기반 업무 이해, 모바일 업무 활용 상용화, 온라인 보고 시스템 도입)
- 경상남도 공무원 혁신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 공유하고, 현장·도민 접점에서 혁신 성과를 창출한 실무 공무원을 알리며 ‘경남행정혁신 사례’ 구축 필요함
- 업무담당 공무원이 주도적이므로 이를 위한 상하조직, 수평조직, 업무분장 모두 섞어 공직생활에서의 스터디 모임 결성 및 도정의 적극 지원 시스템 제안

- **신규 제안 과제**

- 성과평가의 과정과 성과관리 전반에 걸쳐 도민참여를 확대하여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중심의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됨(가칭 도민 평가단)
- 인사와 성과급에 대한 제약이 있으므로 ‘명장’, ‘달인’(행정 달인, 청렴달인, 소통달인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해 존경 받는 공무원상 구상을 제안(호봉 조정 등)



제3부

## 6대 중점과제 점검



## 경제혁신 재원 1조원 조성 및 제조업 르네상스

### 과제추진 상황

- 전략 1의 총 2개 과제, 8개 소과제가 포함된 중점과제 1은 재원조성,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핵심산업고도화, 스마트 산단 및 스마트 공장 등의 과제 등은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인프라 구축 착수 등)
- 경제혁신추진위 위상 관련 재원확보 기능은 양호하게 수행(민선7기 2년 동안 총 7,257억원)
- 신사업 발굴을 위한 조직으로 “경남연구원·경남TP 신규사업 기획전문 조직” 운영 등으로 신규 사업 기획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 외에는 기존 주력산업과 ICT융합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자체 역량 부족 및 경남 주력산업 구조적 모순과 타 지역 대비 기업의 관심도 저하로 전체적인 혁신 성장 동력은 부족한 상태 ⇒ 선도자 역할을 수행할 과제나 분위기 조성 필요(20년 1월 점검의견)

### 과제점검 의견

- 그동안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해 국비 확보에 노력했다면, 민선 7기 2년을 지나면서 국비 확보에 따른 도의 재정 부담, 기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 필요
- 또한 신규사업 발굴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발굴된 사업의 선정, 그리고 실행과정에서 발굴기관만의 사업수행이 되지 않도록 전체 과정을 조직하고 조율하는게 중요. 특히 경제혁신추진위원회 분과에서 제기된 의제들의 정책화 과정,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타위원회, 협의회와 역할 분담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Covid-19 이후 제조 및 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성장계획과 ‘사람’ 중심의 지역성장 계획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방향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
- 경제혁신추진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 수행에 한계(‘19.11.6일 도지사 면담 시 문제제기), 경제혁신추진위원회 분과 활성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산업고도화 및 혁신성장, 산업지원 분과활성화(1주년 점검의견)
  - 분과에서 제기된 의제들의 정책과정,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타위원회, 협의회(지역 혁신협의회)와 역할의 분명한 분담, 정책적 협조
  - 신성장사업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항공우주, 조선해양, 지능형기계, 로봇산업, 나노융합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최종 제품 단위의 산업 구분이 2년이 지난 현재에도 타당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즉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산업기술들을 보면, 기초

요소기술을 바탕으로 공통적인 기술요소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상당 산업군에서 활용되고 있음. 그러므로 사업추진을 위한 현실을 감안해 산업분류를 재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봄. 또한 이들 산업 이외의 산업 육성에 대한 경남의 지원 정책은 어떻게 모니터링되고 있는지를 진단할 필요가 있음 특히 COVID-19 이후의 경남경제 혁신성장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도 있음

- 핵심산업고도화 관련 개별산업의 육성을 통한 고도화도 중요하지만 각 산업에서 5G 기술과 연계한 고도화 전략 필요(스마트 팩토리 구축사업 관련 실감형 콘텐츠와 클라우드 게임과 같은 5G 스마트폰 가입자 대상의 B2C서비스를 넘어 다양한 5G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모바일엣지컴퓨팅(MEC) 등) → 2020년 자문위 신규제안과제로 “엣지데이터센터” 과제 추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은 중장기 검토임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경우 전략과제 점검 의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원 대상의 효과, ICT관련 지원영역의 다각화, 스마트공장관련 데이터 축적 등의 관점에서 구축된 스마트공장 보급에 대한 실제 운영 상황,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특히 스마트 공장 운영 관련 데이터의 경우 스마트산단과 연계하여 운영관리 측면에서 상호 활용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진행은 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1-1-2-③, 경남형 혁신인재 양성(1-1-2-⑤)의 경우,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함을 애로사항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 재원확보도 중요하지만 실행조직 및 거버넌스 개편에 더 세심한 계획이 필요
  - 또한 스마트 제조 인력양성 관련하여 양적 목표에만 맞추어져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적인 목표는 있는지 검토 필요
  - 인력양성의 경우 줄어드는 국비 감액으로 인하여 지역-대학협력 지역혁신플랫폼 사업과 연계를 장기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다만 아직 공모 전이기는 하지만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서 지자체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플랫폼 사업을 R&D사업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 향후 이들을 어떻게 잘 구분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검토할 필요
  - 대학별로 진행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경남소프트웨어산업진흥 플랫폼 사업(과제 1-1-3-⑤)의 인력양성 사업간 중복 문제 등 시너지가 극대화되도록 경상남도과 관련 기관, 대학간 협력이 필수(예를 들면 창원대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스마트제조혁신선도대학사업), 21년 경남 ‘지역혁신성장계획(안)’에 따르면 스마트제조혁신 선도대학 사업(사업비 3,750백만원) 확인)

## ■ 신규 제안 과제

- 제조혁신 스마트(ABBC: AI-Big Data-Blockchain-Cloud) 인력양성센터 설치
  - 스마트인력양성 재직자 교육 관련 예산(도비 4억원) 부족, 미취업자, 대학생 대상 교육사업과 연계 부족.

- 따라서 지역내 대학(경상대, 경남대, 경남과기대, 인제대 창원대 등)과 관련 기업 (LG전자, 두산중공업 등), 지역혁신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움을 통해 **스마트 핵심인재 양성 컨트롤 타워**를 구축, 기 진행중인 사업(각종 인력양성 사업 및 빅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등) 관련 예산의 통합적 운영, 성과 모니터링, 양성 인력의 활용 방안 강구 등 종합적 관리가 필요
- 예산 확보 차원에서 엣지데이터센터나 빅데이터센터 등 국비 혹은 공모사업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한다고 해도, 사안의 시급성이나 긴급성을 따져 지자체 주도로 긴급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방식(예산 확보)의 전환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대학의 인력 및 재직자 교육뿐만 아니라 COVID-19 이후 가동중단기 혹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인력들에 대한 직무전환 교육을 통해 인적 자원 업그레이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Competence Platform)
- 2020년 교육부 지자체-대학협력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역시 제조혁신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것으로서 대학과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창원 이외에 경남 전체로 확산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가치 기반의 사회·행정혁신 시스템 구축과 운영

### 과제추진 상황

- 도민청원제도(도민참여센터와 온라인 플랫폼 포함)
  - 경남1번가는 경상남도 민선 7기 인수위원회 때 도민참여센터 경남1번가(온·오프라인)를 시범운영(2018.6.27.~7.19.)하면서 총 932건(정책제안 259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이 중 45건이 도정4개년계획에 반영되었음
  - 이후 경상남도 대표 홈페이지의 게시판 형태로 운영되다가 2019년 1월 사회혁신추진단이 정식 출범하면서 도민참여센터담당으로 경남1번가 업무가 분장되었고, 2019년 10월 30일 온라인 도민참여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제안→공감→토론→도민제안협치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는 숙의형 민주주의 온라인 경남1번가로 개편됨
  - 온라인 접근이 취약한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경남1번가를 1년에 4회 운영하였음
  - 2020년 2월에는 서부청사 민원실에 서부경남 도민들의 참여를 위한 경남1번가 안내공간을 설치하였음
  - 온라인 참여 현황을 보면 2020년 6월 10일 현재 총 187건이 제안되었고 찬반 토론하기로 넘어간 제안이 2건 그리고 도가 채택한 제안이 2건임
-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사회적 대타협 실현(추진상황 II-2-23-① 참조)
  - 노사민정협의회는 경남의 협의회지만 노동계는 현실적으로 중앙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음
  - 김경수 도정은 이런 전국 상황과 관계없이 노동계와 대화하기 위해 노동정책과를 신설하였고 노동특보를 임명하였고 2019년 12월에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확대 개편. (코로나19로 2020년 2월 23일부터 쉼터 운영 중단)
  - 그 동안 노동계가 참여에 소극적이었으나 코로나19로 노동자들의 실직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대화의 물꼬가 조금씩 트이고 있음
  - 경상남도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여 2020년 5월 노사민정협의회 내의 분과들이 모임을 재개하고 있음
-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의 공동개발과 적용(추진상황 III-3-45-② 참조)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정혁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에서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가치와 철학으로 안착되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민선 7기 출범 이후 1년 동안은 검토를 하여 사회적 가치 반영한 지표를 적용(619개 중에 370개에 반영) 하고 있으며 워킹그룹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지표 개발과 적용이 결국에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므로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함

#### ● 사회혁신 추진 상황

- 경제혁신, 사회혁신, 도정혁신 등 3대 혁신의 궁극적 방향과 목적은 넓은 의미의 사회혁신임
- 2년 동안 경남에서 생소했던 사회혁신은 큰 물결이 되어 시민사회, 공기업, 공직사회 등에서 담론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회혁신의 내용인 사회적 가치는 중요한 가치와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사회혁신을 위해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이 주축이 되어 1)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토대 구축, 2) 시민사회 역량 강화와 사회혁신 모델 발굴, 3) 민관 협치 체계 구축과 협치 문화 확산, 4)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한 도민 참여 활성화, 5)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 발굴과 생활안정 지원 추진 등을 노력해 왔음

### ■ 과제점검 의견

- 도민과 공직 사회의 소통과 거버넌스 등을 위한 시스템은 이제 어느 정도 갖추어졌음. 이제 이런 시스템에 도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정혁신, 사회혁신 등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좋은 사례를 찾아 확산해야 함
- 코로나19로 다시 가동되고 있는 노사민정협의회 분과 모임을 계기로 노동과 경영 그리고 경상남도가 모두 혜택이 가는 과제, 사업 등을 함께 찾는 포럼이나 공모 등을 모색할 필요 있음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혁신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도민, 공무원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 필요하며 어느 정도 갖추어가는 중간지원 조직들이 민과 관의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 총평

- 코로나19는 후의 사회가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음. 소통과 정보 유통에서는 온라인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과제를 해결하는 현장에서는 적합한 대면 관계가 중요함. 그러므로 온라인 디지털과 현장성이 협력과 분업을 통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한편 인적, 물적 자원이 집중됐을 때의 효율이 있는 반면 위험도 있음. 집중과 분산 그리고 적정한 규모의 최적화를 찾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사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재구성을 해야 함
- 노사민정협의회, 도민 참여, 사회혁신 등에 있어서 사회와 정부, 경상남도가 그린, 소셜, 디지털, 로컬 등을 반영한 정책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서부경남 KTX신성장 경제권 구축

## 과제추진 상황

- 목표 1, 전략 1의 과제 5(서부경남 KTX 조기착공)와 과제 6(서부경남 혁신클러스터 조성)로 구성된 중점과제 추진 상황은 두 과제 모두 중장기 과제이고 민선7기 내에 이루어지기 힘든 과제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KTX 조기착공의 경우 사업 우선적으로 계획 적정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조기 이행 필요, 즉 복선화 등 새로운 내용 들을 반영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설득, 신설역사 등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을 잘 조정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 항공ICT융복합 클러스터 조성도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19. 6.)으로 항공국가산단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신성장 경제권 구축을 위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과제점검 의견

- 서부경남 KTX의 경우 고속철도의 안전 운행 및 항공·조선산업 활성화에 따른 물류 이동 증가에 대비하여 김천~진주 간 복선화 건설에 필요한 관계부처 협의 및 여론 조성이 지속적으로 필요
  - 신설역사 설치 및 건립 관련,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업의 당초 취지와 원칙에 충실하게 하되 관련 타 시군구의 주장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
- 20년 1월 점검시 제안되었고, 또 경상남도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계획되어 있는 '경남신성장상생기금 조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즉 지역 사회 및 해당 이해당사자들이 동 기금 조성에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 설득, 여타 사업에 있어서 관련 지자체들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또한 혁신도시 발전계획 관련 정책 시행과정 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알려지고,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 역할 분담 등 다양한 수준에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 '혁신도시 시존2는 그간 특화산업(항공우주) 관련 사업 유치 및 산업지원 중추도시 육성이라는 목표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2020년 1월 점검의견)
  -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2019.6)으로 탄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되나, 관련 인력양성 시스템을 갖추는데 지역 거점대학의 역할이 미흡. 즉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특화산업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평가), 항공우주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 필요

- 혁신도시 지역우수인재 채용과 관련하여 “지역선도대학 사업”의 내용을 검토하여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검토할 필요도 있음, 즉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의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특화산업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평가), 항공우주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고민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이런 점에서 지역-대학 협력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이 선정될 경우 2차년도의 과제에 항공우주관련 인력양성 기관으로서 ‘항공우주 대학원대학’ 등을 계획할 필요도 있음
- 경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21년 완공 예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능 측면에서 지자체(진주)의 지식산업센터(망경동 소재, 완공)등 유사 기능 시설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지 검토. 이럴 경우 정책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검토해야 하며, 지자체의 자율권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국가 정책을 따를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 지역전략 항노화산업의 경우, 소재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와 관련 연구장비 공동 활용 시스템구축, 산업화(사업화)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항노화엑스포, 항노화 산업단지, 클러스터, 체험지구 조기 건설 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항노화산업의 컨트롤 타워로서 지역 내 관련 기구 정비,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의 소속 변경 및 지원 확대 등이 필요

## ■ 신규 제안 과제

- 항공우주아카데미(학,석,박사) 설립
  - 기존 대학의 역할이나 운영 관련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고, 또한 항공우주 관련 인력양성에 대학에 의존해야한다는 생각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필요가 있음
  - 항공우주관련 기능 및 초등 인력양성 기관 통합적 운영(지역혁신선도대학 기능 일부 이전 등을 통한 학부생 양성, 거점대학 주도), 설립 형태는 칼텍처럼 단과대 형태로서 전문대/대학교/대학원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의 단과대학일수도 있고, 항공우주관련 고숙련 인력 및 연구개발인력 양성 아카데미 형태 혹은 수도권의 항공대학 등을 이전시키거나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고숙련 설계 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혹은 단과대학은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지역에 소재한 대학(전문대학 포함), 재정력이 있는 공사기업이 공동으로 재정을 출연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국내 최초의 ‘거버넌스형 대학원대학’
  - 예산은 총 400억 원 규모(국비: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선정시, 지방비, 고용노동부, 경남 신성장 상생기금 등)

## R&amp;D 체계 혁신으로 사업화 촉진

## 과제추진 상황

- 목표 1 전략1 해당 과제 1개(소과제 7개)를 포함하고 있는 이 중점과제는 강소연구개발특구 3곳 지정, 전자부품연구원 동남권본부 설립 업무 협약('19.9.2), 한국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19. 12월)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삼성SDS, 프랑스 다쏘시스템 등 대기업의 연구관련 부서 이전 등 대기업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2020년 1월 점검 내용 중)
- 강소연구개발특구 3곳 지정(의결 6.19, 고시 8.7)으로 완료된 사업으로 표시(100%) 이후 사업화 진행에 있어서 기본 방향 불분명(기업사업화, R&D융합, 고도화 거점 등 사업별로 내용이 무엇인지, 대학과 지역혁신기관의 역할분담, 타 국비 공모 사업 조달 방안 등)

## 과제점검 의견

- 제조업 혁신,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등 스마트 경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가?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그것이 TP가 되었든 아니면 대학이 되었든)
-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경우 ICT융합기술에 대한 특화분야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제조ICT에 대한 기술핵심기관의 강소연구개발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R&D공동연구 플랫폼(과제 1-1-3-②)의 경우, 수소경제 관련하여 협의회(워킹그룹 등)를 형성하는 단계라고 판단됨. 향후 경상남도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사업의 방향과 부합하도록 방향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내용 중 수소경제권 관련, COVID 19 이후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하여, 2020년 경상남도의 3+2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중요성과 시급성을 더 부각하고 정책과제 개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주요 연구기관 및 대기업 R&D센터 유치 과제의 경우
  - 연구기관 분원 유치 대상 발굴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진행상황(이전지역, 이전 대상 기관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재료연구원 승격(1-1-3-④)문제는 ‘원’ 승격으로 이행을 100%를 달성하였으나 향후 계획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지역 연구개발사업과 연계 방안 발굴 및 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원 승격에 따른 조직정비 과정에서 경상남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중소기업 R&D사업화 지원사업은 이행을 100%를 달성하였으나 성과 모니터링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음. 즉 센터가 설치된 테크노파크(TP) 자체적으로 수행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평가 절차나 기구가 필요(20년 1월 점검의견)
- 2020년 1월 점검 시 엣지데이터센터 설립 관련 진행 상황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 신규 제안 과제

- 모바일 엣지데이터센터 건립
  - 2020년 1월 점검 시 엣지데이터센터 설립을 신규과제로 제안 이후 중장기 과제로 설정
  - 예산 확보 차원에서 엣지데이터센터나 빅데이터센터 등 국비 혹은 공모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한다고 해도,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한 제조업기업들의 신속한 대응 등 사안의 시급성이나 긴급성을 따져 지자체 주도로 긴급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방식(예산 확보)의 전환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R&D체계혁신 및 사업화 차원에서 각 산업에서 5G 기술과 연계한 고도화 전략 필요, 즉 스마트 팩토리 구축사업 관련 실감형 콘텐츠와 클라우드 게임과 같은 5G 스마트폰 가입자 대상의 B2C서비스를 넘어 다양한 5G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모바일엣지컴퓨팅(MEC) 등에 기반한 데이터 센터와 이를 사업화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모바일 엣지데이터센터를 건립할 시에는 H/W구축보다는 지원 인력 및 지원 체계 수립에 중점을 두며, H/W인프라의 경우에는 기존 상용 혹은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으로 먹거리 공공성 강화

### 과제추진 상황

- 실행 (2): ① 지역푸드플랜 수립(광역 포함 6개소 / 3분기 1개소 진행), ②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4개소 건립 완료 및 2개소 운영, 2개소 운영 준비 중 / 5월 건립계획 3개소)

### 과제점검 의견

- 세부과제 실행을 위한 담당부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중점과제 수행을 위한 담당부서의 한계가 많음, 먹거리과제를 국가푸드플랜 아래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다수의 지자체는 먹거리 담당부서의 기능과 역할을 상향조정하는 추세인데 경남은 핵심 정책과제임에도 여전히 담당계(팀)에 머물고 있음.(최소한 담당과 승격이 필요함). 농정국 내 푸드플랜 관련 역량 있는 직원의 재배치가 필요해 보임. 그리고 부처를 아우르는 기구가 필요한 것은 과제로 수실 도출된 바 있음 (사회혁신추진단의 주요과제로 푸드플랜이 포함되고 조직보강이나 실천방도를 고민할 수 없을까 하는 제안을 함)
- 지난 6개월 정도 먹거리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이 거의 없었음. 먹거리위원회 운영 혁신을 통한 기능과 역할 재조정 필요(농특위 기획단과 연계하여 즉각적 기획과 제안, 실천 중심의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함)
- 소비지역 중심인 부산의 푸드플랜과 공유해야 하며 부울경 광역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운영 과정에 민간의 참여 보장이 여전히 없음, 관의 주도를 기반으로 민간의 협의체가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선언과 실천을 제시해야 함
- 푸드플랜에서 추진하는 보건복지 등의 영역과 관련하여서는 계획 수립과정에서 농정국 내의 논의 중심으로 되어 도내 타 부서와의 실질적인 업무협의 등의 자리가 없었으며, 담당자 표현으로는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요청도 쉽지 않다고 함. 다른 부서에서는 푸드플랜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고 협조의 적극성이 낮은 경향이 있음. 타부서에 푸드플랜 관련 2020년 신규사업이 농정국 농식품유통과 외에는 반영된 것이나 자체적으로 발굴한 것이 없는 것을 보면 증명됨
- 푸드플랜이라는 주요정책이 말만 무성하지 않으려면, 하나라도 성과를 내실 있게 챙겨야 함. 가령, 공공기관 급식공급은 2020년부터 진주텃밭이 LH급식을 시작해 보기로 협의되었는데, 수의계약 시 2회 이상 재계약이 어려운 문제, 금액제한 등으로 한정적인 공급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러다보니 수익구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음. 이런 것들부터 나서는 문제를 짚어가면서 공공기관급식을 확대해가며

성과를 축적하고, 도청 서부청사 구내식당부터 로컬푸드 수의계약 공급으로 바꾸면서 타 기관을 견인하는 등 공공급식 하나라도 성과를 내어야 함

- 복지영역 또한 공급조직이 가능한 시군에서부터 보건소 영양플러스, 저소득 건강 먹거리지원사업 등을 입찰방식이 아닌 로컬푸드 공급방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 이런 것들의 집행에 나서는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도민들에게 푸드플랜을 다각적으로 홍보하지만 여전히 인식이 낮고 호응이 미약함. 주민의 삶에서 푸드플랜으로 바뀌는 부분이 느껴져야 되는 것인데
  -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은 로컬푸드 급식 받아보니 좋다
  - 산모들은 로컬푸드 영양식 받아보니 다르다
  - 학생들은 푸드플랜 하니 지역농산물 과일을 학교에서 주는구나.
  - 농민들은 내 농산물이 적절한 가격에 공공급식과 직매장으로 공급되는구나. 라는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성과관리가 필요할 것 같음
- 광역 및 시군 공공급식센터 짓는 것이 주요한 것이지만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찾아 연결시키고 현장의 역량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가야함. 현재의 로컬푸드 민간주체들은 다들 경영적 어려움으로 문을 닫느냐 마느냐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실정인데 푸드플랜 정책과 사업의 확대 전개로 기존 판로가 안정적인 대농가들이 갑자기 주변에 몰리는 현상이 야기되고 있음

## ■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 총평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먹거리공공전달체계의 인식 전환과 푸드플랜의 실효성을 위한 세부 과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짐. 학교급식 꾸러미 배송, 과일꾸러미 등을 통한 비대면 직배송 운영 등은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보지만, 경상남도와 교육청, 농협, 로컬푸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대한 각종 장벽, 애로점이 드러남(계획하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소모됨). 비상한 시기에 맞는 전시행 후평가 등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먹거리전달체계의 혁신 전략이 요구됨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과 비상한 상황에 농업과 농촌에 끼친 영향 또한 대단히 충격적이었음. 아울러 새롭게 설계하고 전환해야 하는 과제 또한 행정 및 농촌 현장에서도 속도감 있게 생산됨.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농촌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아울러 농업과 농촌의 다변화를 주도할 농민의 역할과 책무가 그린뉴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가 되었음. 이에 경남의 농정의 틀이 여전히 행정 주도의 다소 경직된 방향제시에 머물러 있으며, ‘특별’하게 운영되어야 할 경남 농특위와 먹거리위원회 두 협치기구가 모두 정체해 있음은 대단히 아쉬움



## ● 신규 제안 과제

〈코로나19의 정국 속에서 다시 고민해볼 것〉

### 1. 농산물 꾸러미 취약계층 긴급지원

- 현재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 불가로 인한 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식재료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 외 별도, 공적재원의 확보 필요)
- 학교급식 참여농가의 식재료를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수집 소분 후(기존 급식방식) 개별배송(추가적 공급망 및 예산 필요)
- 친환경 농가의 생산품은 농산물 중심이므로, 가공품, 축산물을 함께 공급할 필요 있음
- 재난소득 지급하듯이 도차원의 긴급생계지원 정책(예산)과 연계되어야 함

### 2. 농산물꾸러미 사주기 캠페인 및 바우처 제공

- 공무원, 대형사업장(기업 및 공단, 노조) 차원의 농산물꾸러미 사주기 캠페인 전개 (도차원의 홍보물, 구입처(로컬푸드 직매장 등) 알선)
- 참여 공공기관, 사업장에 대하여 할인쿠폰 제공(도비 예산 편성 또는 기업의 사회 공헌 예산, 노조 등의 사회연대기금 및 자발적 성금 등)
- 일반 소비자는 대대적 홍보 및 지정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시 구매액에 따라 쿠폰 제공(도 및 지자체 예산), 대상품목 지정은 고민할 부분 있음

### 3. 로컬푸드 직매장 온라인 주문 및 배송

-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온라인 주문배송 급증에 따른 반면교사(로컬푸드는 온라인 구입 배송이 어렵다는 인식과 현실)
- 온라인 배달대행 서비스(배달의 민족, 생각대로 등 대행업체)와 제휴하여 로컬푸드 배송주문 이벤트를 개설 및 캠페인
- 로컬푸드직매장 주문처리 및 상품구성, 배송료 지원(도 및 지자체)

### 4. 도내 조직화 방안과 물량확보 관련

- 경남이 충남이나 경기지역처럼 친환경 식재료 학교급식의 공급 비중이 낮고 일부지역 (거창,김해) 및 품목(쌀)등으로 제한적이어서 한계는 예상됨(수요 대비 공급 부족, 시군별 공급물류망 부재), 새로 조직화 및 물량확보를 하기에 시간이 촉박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
- 일부품목 수매방식으로 식재료 사전 확보(급식용 수매가능 품목에 대해서 지역농협 등을 통하여 중간수매 및 저장방안 검토)



## 저출생 총력 대응 및 공공의료 기반 구축

### 과제추진 상황

- 경남 공공산후조리원 권역별 설치
  - 2021년 밀양시 개원을 목표로 준공을 준비하고 있음
-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19.12.26)
  -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 운영위원회 구성('20.5.7) 및 도민토론회 진행 중('20.7.4 도민토론회 종료 예정)
  - 「경상남도 보건의료체계 진단 및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운영」연구 최종보고회 개최('20.6.18)
  - '20년 지역책임의료기관 공모 선정(마산의료원)('20.5.13)
  - 당직의료기관 1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전환 지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추가 지원 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 격상 지원 3개소
  - 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 진행
  - 고성군, 산청군 의료취약지 외래 산부인과 운영
  -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확대 및 읍면동 건강위원회 확충
  - 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
    - 헬리패드 도비 교부결정('19.12월)
    - 시설 설계 승인('20.3.4)
  -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 창원경상대병원 선정
  - 영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 양산부산대병원 선정

### 과제점검 의견

-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협의회의 성공적 운영 및 정책 전환
  - 현재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된 공론토론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도민토론회의 안정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도민들의 숙의와 참여에 기반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7월 4일 결정될 공론토론 결과를 정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함
-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과정 진행 필요
  - 「경상남도 보건의료체계 진단 및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운영」연구 종결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전환 과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행정조직 개편, 기술지원조직 개편,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추진단 구성 등 체계와 관련된 의사결정 및 실행 주체를 만드는 과정을 구체화해야 함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는 추가 비용 및 다양한 영역의 공익적 적자가 발생할 수 있음
  - 경상남도 자체 대안 및 부산광역시와의 업무 협조체계 구축으로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 있음

## 총평

-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포함한 권역별 통합의료벨트의 개념 설계는 완성된 것으로 판단됨
  - 상세설계를 통한 정책전환 과정이 남아 있음
  -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하나 권역별 통합의료벨트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주체 형성과 관련된 영역의 우선순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도민건강국 설치, 경남건강재단 설치, 경상남도과 권역별 국립대병원 간 MOU 체결을 통한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추진단 구성, 시민사회 내 주민참여기구인 건강위원회 확대 및 제도화 검토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시 부산광역시의 어린이 재활 환자들의 이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산광역시와의 재정분담 협조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및 시범사업과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사업의 체계적 연계
  -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및 시범사업 영역에서 보건의료부문의 접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함
    - 커뮤니티 케어를 중심으로 하는 연계는 경남사회서비스원과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내용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건과 복지부서 간 합리적 역할 분담에 근거한 사업 추진을 시행해야 함

- 보건지표의 질 개선 및 자체 근거기반 확충을 위한 ‘경남 보건의료패널 조사’ 실시
  - 경상남도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주요 지표인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지표의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필요
  -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조사 전체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나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지표를 생산하여 근거에 기반한 보건의료정책 생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 검토 필요
  - 권역별 통합의료벨트의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특화된 근거기반 확보 필요
  - 현 단계에서 근거에 기반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남 보건의료패널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제4부

참고사항



# 1 도정4개년계획 과제별 전담부서 및 협력부서

## 46개 과제

목표	전략	도정과제	전담부서	협력부서
다시 뛰는 경남 경제	전략1. 경남 신경제지도의 체계적 이행			
	1	경제혁신 재원 1조원 조성 및 경제혁신 추진체계 구축	산업혁신과	예산담당관 일자리경제과
	2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사업 확충	산업혁신과	전략산업과 신산업연구과
	3	R&D 체계 혁신과 광역연구플랫폼 구축	신산업연구과	산업혁신과
	4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항만물류과	
	5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6	서부경남 혁신 클러스터 조성으로 광역경제권 구축	신산업연구과	전략산업과 서부정책과 항노화산업과
	전략2. 도민에게 희망주는 좋은 일자리 창출			
	7	청년일자리확충 및 사회안전망 구축	창업혁신과	일자리경제과
	8	재도약을 돕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일자리경제과	여성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 노인복지과
	9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복지정책과	
	전략3. 공정하고 활력있는 민생경제			
	10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지원	소상공인정책과	
	11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확립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정책과
	12	중소기업 고용·투자 환경 개선	일자리경제과	
	13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추진단	
	전략4.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조성			
	14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으로 먹거리 공공성 강화	농식품유통과	
	15	농산물 수급안정 및 친환경 농업 실천 확대	친환경농업과	
	16	미래형 스마트 농업인 육성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원
	17	농어업인과 함께하는 협치 농정 실현	농업정책과	해양수산물과
	18	수산자원 고부가가치화로 살기 좋은 어촌 조성	해양수산물과	어업진흥과
사람 중심 경남 복지	전략1.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강화와 공공의료체계 혁신			
	19	교육의 공공성 강화	통합교육추진단	
	20	청년이 함께 만드는 청년정책 추진	청년정책추진단	건축주택과
	21	출산·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가족지원과	
	22	지역 공공의료보건서비스 증진	보건행정과	장애인복지과

목표	전략	도정과제	전담부서	협력부서
사람 중심 경남 복지	<b>전략2.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 실현</b>			
	23	노동자 권익 보호	노동정책과	노인복지과 인 사 과 예산담당관
	24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여성정책과	
	25	장애인 인권보장 및 자립기반 강화	장애인복지과	
	26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보건행정과
	<b>전략3.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b>			
	27	최적의 대기질 관리	기후대기과	보건환경연구원
	28	낙동강 수질개선	수질관리과	
	29	에너지 전환사회 구현	신산업연구과	에너지산업과
	<b>전략4. 함께 누리는 문화 생태계 조성</b>			
	30	도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창작환경 개선	문화예술과	
	31	생활 속에 함께 누리는 체육기반 확충	체육지원과	
	32	모두가 찾고 싶은 힐링관광 조성	관광진흥과	
	<b>전략5.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조성</b>			
	33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활력 제고	도시계획과	
	34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구현	도시계획과	교통정책과
	35	수요자 중심 광역교통체계 확충	교통정책과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36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체계 강화	안전정책과	통합교육추진단 재난대응과 예방안전과
함께 여는 혁신 도정	<b>전략1. 참여 민주주의 확대로 만드는 사회혁신</b>			
	37	대의민주주의 제도 보완	행 정 과	
	38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활성화	사회혁신추진단	정책기획관 감 사 관
	39	도민정책참여 플랫폼 마련	소통기획관	건축주택과 서부정책과
	<b>전략2. 협력과 갈등관리의 협치 체계 구축</b>			
	40	도의회와 협치 시스템 구축	정책기획관	의회사무처
	41	통합교육행정체계 구축	통합교육추진단	
	42	지방정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대외협력담당관	행 정 과
	<b>전략3. 공무원의 자율로 이루는 행정혁신</b>			
	43	정보공개, 자원 공유로 열린 도정 실현	인 사 과	
	44	도민 중심의 규제 혁파와 민원 개선	법무담당관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건설지원과 서부민원과
	45	적소적재의 인사혁신과 칸막이 없는 행정	인 사 과	정책기획관
	46	공직생활이 즐거운 공무원	행 정 과	인 사 과



## 6대 중점과제

중점과제명		전담부서	협력부서
1	경제혁신 재원 1조원 조성 및 제조업 르네상스	산업혁신과	전략산업과 신산업연구과 항노화산업과 서부정책과
2	사회적 가치 기반의 사회·행정혁신 시스템 구축과 운영	사회혁신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정책기획관 행 정 과 인 사 과
3	서부경남 KTX 신성장 경제권 구축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전략산업과 신산업연구과
4	R&D 체계혁신으로 사업화 촉진	신산업연구과	산업혁신과
5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으로 도농상생	농식품유통과	
6	저출생 총력대응 및 공공의료 기반 구축	보건행정과 가족지원과	정책기획관 장애인복지과

## 2 2020년 도정 운영방향



### 3대 핵심과제

청년 특별도	
청년이 돌아오고 찾아오며 머무는 청년특별도 조성	
① 청년이 참여 주도하는 거버넌스	② 창조·가치 실현의 새로운 기회 부여
③ 경남 청년의 어려움 해소와 삶의 안정 추진	④ 청년에게 희망주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창출
⑤ 현장 특성에 부합하는 청년 귀어·귀촌 정책 추진	⑥ 청년이 원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
⑦ 경남형 청년 문화특별도 육성	⑧ 청년친화형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 추진
⑨ 청년농업인 맞춤형 정착 지원	⑩ 청년 귀산촌 활성화(직업체험·창업캠프) 사업
교육 인재 특별도	
우수한 인재를 지역공동체가 함께 길러내는 교육(인재)특별도 조성	
① 경남형 아이돌봄 모델 개발	② 민관협업으로 아동 놀이공간 혁신사업 추진
③ 에듀테크 기반 미래학교 모델 개발	④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공간 혁신 추진
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⑥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혁신체계 구축
⑦ 방문스포츠팀 유치지원센터 설립·운영	⑧ 경남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확대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동남권을 또 하나의 수도권, 메가시티 플랫폼으로 구축	
①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	② 동남권 지진방재연구 클러스터 구축
③ 동남권 수소경제권 구축	④ 동남권 공동 산업육성체계 구축
⑤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⑥ 동남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⑦ 동남권 광역관광 대응체계 구축	⑧ 동남권 먹거리 공동체 실현
⑨ 동남권 생태투어 기반 조성	⑩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

## 혁신과 성장

### 3대 국책사업의 본격적 추진

- ① 경남창원 스마트산단, 혁신성장 표준모델로 조성
- ②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으로 제조혁신 기반 조성
- ③ 강소특구 등을 통한 중소기업 R&D 사업화 지원
- ④ 경남 중심 제2신항 건설, 글로벌 경쟁력 확보
- ⑤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 본격 추진

### 중단 없는 경제·사회·도정 3대 혁신

- ① 경남형 인구정책 추진
- ② 지역주도의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
- ③ 도민 중심의 현장소통형 규제개혁 추진
- ④ 인사혁신 실행으로 도정역량 강화
- ⑤ 경남형 시군간 연계협력 추진
- ⑥ 도민참여로 민관협치 활성화
- ⑦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추진
- ⑧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확대
- ⑨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 주력산업 고도화, 신산업 육성의 가속화

- ① 주력산업 고도화로 지역혁신성장 체계 구축
- ②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
- ③ 경남형 산업단지 대개조로 산업 경쟁력 강화
- ④ 제조혁신 창업생태계 활성화
- ⑤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으로 경남산업 Re-design
- ⑥ 미래형 스마트 양식산업 확산
- ⑦ 공공디자인 향상으로 품격있는 도시공간 구현
- ⑧ 시군 및 광역 관광연계로 상생협력 강화
- ⑨ 도민참여 경남관광 추진체계 구축
- ⑩ 관광 수용태세 개선, 체류형 관광 활성화
- ⑪ 경남혁신도시 新지역성장거점 육성
- ⑫ 항노화산업클러스터 기반 구축
- ⑬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 ⑭ 산업·고용위기지역 전략프로젝트 사업 추진

## 체감하는 변화

### 소득 불평등 개선과 민생경제 회복

- ① 고용이 지속되는 좋은 일자리 확대
- ② 청년·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 ③ 위기극복 중소기업 성장 촉진
- ④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 ⑤ 어촌뉴딜300사업 본격 추진
- ⑥ 경남형 도시재생, 도시경쟁력 강화
- ⑦ 노인일자리 획기적 확대 추진
- ⑧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우선구매 활성화
- ⑨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 ⑩ 농산물 수급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보장
- ⑪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 ⑫ 경남대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 여성이 살기 좋은 경남

- ①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설립
- ② 여성친화도시 확대 추진
- ③ 경력단절여성 창업·취업 지원
- ④ 다문화가족 역량강화로 경제적 자립지원

### 쾌적하고 안전한 도민의 삶 보장

- ① 데이터 기반의 재난대응 시스템 체계 구축
- ② 민관협업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문화 정착
- ③ 스마트시티 조성, 도시혁신 동력 창출
- ④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⑤ 가야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통한 향유기반 조성
- ⑥ 스마트 기술융합 현장대응 골든타임 확보
- ⑦ 구급품질 제고로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
- ⑧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 ⑨ 오염원 저감을 통한 낙동강 수질 개선

### 도민이 함께 누리고 잘 사는 따뜻한 복지

- ① 노동자가 체감하는 노동복지 및 권익증진 확대
- ② ICT 활용한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제공
- ③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편
- ④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 확충
- ⑤ 어르신센터 확충 및 운영
- ⑥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긴급육아·공공가사도우미 지원

### 3 신규 제안 과제 반영 현황

◆ 도정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19.6월) 시 제안 : 32건

■ 이행과제에 반영 : 9건

연번	이행과제	제안 내용
1	사회적경제 활성화	◦ 경남 사회적경제육성 전략기획단(T/F) 신설
2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으로 먹거리 공공성 강화	◦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조례제정 ◦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3	청년정책 추진체계 확립	◦ 청년정책플랫폼 구성 ◦ 경남청년 축제(박람회, 토론회 등) 개최
4	청년터 조성	◦ 청년복합센터 건립(생활SOC사업과 연계)
5	도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기질 관리	◦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6	생활체육 활성화	◦ 경남 방문 스포츠팀 유치 지원센터 설립
7	열린 관광 1번가 조성	◦ 관광진흥재단 조직 확대 및 타 시도 조직 기능 추가 연구 ◦ '경남관광품질인증제'와 '서비스품질 보증제' 도입 ◦ 세코를 최첨단컨벤션센터로 조성
8	도시재생 활성화	◦ 스마트시티 유치자문단 구성
9	남해안 고속화철도 조기 개통	◦ 경전선 고속철도화(남해안고속화철도 연계)

■ 중장기 검토 : 6건

연번	위원회 제안사항	부서 검토의견
1	'경남 정책 시청자 액세스 프로그램' 지원 및 '완전히 새로운 경남' 미디어 센터 조성	◦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가 '22년 완공 예정으로 진행 중이며, 완공 시점에 도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계획
2	통합교육행정체제 구축에서 공공건물 담장 허물기, 유휴 공간 시민개방	◦ 학교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등 시설 개방하였으며, 추가 개방 필요할 경우 교육청과 협의하여 확대 추진
3	경남 문화예술도시 재생 지원단 설립	◦ 道,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기관(LH, 경남개발공사), 관련 전문가 등 유기적 결합 구조 필요
4	주요 관광지 관광경찰도입	◦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운영 시 연계 추진 검토
5	공익형직불제 관련 농업인 교육 등을 통해 농촌형 활동가 양성 (일자리) 단초 마련	◦ 공익형직불제로 농촌형 활동가 양성사업 가능 여부 검토 후 추진(현재 공익형직불제 사업범위에 미포함)
6	수자원관리과 신설	◦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에 맞추어 道 물관리 조직개편 필요성과 인력증원 등에 대해 협의 및 검토 중

## 기 추진 중 : 7건

연번	위원회 제안사항	부서 검토의견
1	경력 없는 여성지원 프로그램 신설	◦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인턴인센티브 확대' 지원 사업에 경력단절 여성과 함께 포함하여 지원 중
2	젠더전문가 채용 배치	◦ '여성특별보좌관'을 젠더 자문관으로 활용 중
3	경상남도 주민참여조례 제정	◦ 주민참여3법(주민조례발안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제·개정 추진 중 (→ 완료 즉시 조례 제정 추진)
4	경남체육회관 건립	◦ 경상남도 스포츠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수립 용역 추진 중('17.7월 ~ '19.12월)
5	경남 가야문화복원 및 관광자원화 마스터 플랜 수립	◦ 가야역사문화도시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19.5월 ~ '20.5월)
6	농산물 조사분석의 협력체계와 거버넌스 구축	◦ 주요 농산물 생산실태 및 분석 시 농촌경제연구원(KERI)·대학교·농식품부·농업기술원 등 협력체계 구축·운영 중
7	2020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지원 확대	◦ 2020년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경남 유치에 따라 예산지원(도비 2억원) 계획

## 미반영 : 10건

연번	위원회 제안사항	부서 검토의견
1	경남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조례 제정	◦ 장소선정, 설치·운영 등은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
2	정보·민원·홍보와 관련된 조직의 통합개편	◦ 정보·민원·홍보 관련 기능의 조직 통합 개편은 규모 및 업무 효율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수용 어려움
3	경남 신성장산업 전략기획단 신설	◦ 산업간 연계, 대외기관 대응창구 단일화, 기존 협력체계 활용 등을 위해 기존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4	경제혁신 전략기획단(T/F) 구성	◦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지역혁신T/F가 운영 중에 있으므로, "경제혁신 전략기획단" 구성은 기능 중복
5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 설립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므로 현 시점에서 추진 어려움
6	국립 남부건축·디자인센터 구축	◦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 관련 계획 없으며, 공공건축가제도 활용하면 건축 및 도시공간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7	공공체육시설 18시간 운영개방	◦ 현재 공공체육시설은 통상 06:00~22:00까지(16시간) 운영 중이나, 이용도 낮은 2시간 추가개방 현실적 어려움
8	서부경남 신성장 상생기금 조성	◦ 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서부경남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맞지 않으며, 기금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님
9	항노화주식회사 청산 및 웰니스 관광센터 설립	◦ 상법, 출자출연법 등 관계 법령 상 해산(청산) 요건 미충족 ◦ 항노화(주), 사업 다각화로 경영안정화 모색 중
10	녹조발생시 상수원수 및 수돗물 조류독소 평가단 발족	◦ 최근 5년간 정수된 수돗물에서 조류독소 검출사례 없어 별도 평가단 구성 무의미

## ◆ 도정자문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20.1월) 시 제안 : 24건

### ■ 반영 : 3건 ⇒ 별도사업으로 추진

연번	위원회 제안사항	부서 검토의견
1	엣지데이터센터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제조)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추진('20년~'22년 예정)</li> <li>◦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 논의 중</li> </ul>
2	18시간 공공체육시설 운영 - 17시간 시범운영 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공공체육시설은 통상 06:00~22:00까지(16시간) 운영 중이나 시·군 여건에 따라 자율추진토록 시행</li> </ul>
3	대기오염총량제에 대비한 면오염원과 선오염원에 대한 기초조사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2020.4월, 환경부)</li> <li>◦ 경상남도 시행계획 수립(2021.4월, 경상남도)</li> </ul>

### ■ 중장기 검토 : 15건

연번	위원회 제안사항	부서 검토의견
1	경남 신성장상생기금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도시법에 따른 도, 진주시 기금조성으로 경남혁신도시와 시군의 상생협력사업 추진 검토</li> </ul>
2	R&D 기획 및 관리 전담 조직(기관)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각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는 R&amp;D 사업을 총괄 할 수 있는 R&amp;D 육성 계획 등을 수립, 시범사업 실시 후 전담기관 설립 검토</li> <li>◦ 지역혁신성장계획, 지역혁신플랫폼 사업과 연계(지자체-대학-혁신기관 등)하여 플랫폼의 컨트롤 타워인 지역협업위원회에서 전담 관리 검토</li> </ul>
3	전통시장 특화상품 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에 소포장 신선품을 골목슈퍼에 배송하는 '쿨체인 시스템'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50백만원)을 실시할 계획으로, 연구용역 시 '전통시장으로의 납품'도 포함하여 타당성 검토 추진</li> </ul>
4	소상공인·창업자를 위한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에 특화된 소상공인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은 현재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구축 중인 '경남 빅데이터 허브'와 연계하여 중장기 검토가 필요함</li> </ul>
5	농정추진체계(농어업특별위원회, 먹거리위원회) 일원화 위한 TF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특별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방안* 또는 행정기구로서 TF팀 구성 방안 등 타 시도 운영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li> </ul>
6	보건지표의 질 개선 및 자체 근거기반 확충을 위한 경남 보건의료패널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건강조사 개선에 대한 연구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보건의료패널 조사 시행 추진</li> </ul>
7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실현 위한 부서별 젠더정책 담당관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양성평등담당관제 지정·운영, 향후 벤치마킹 등을 통해 성과 등을 검토 후 실시</li> </ul>
8	난분해성 물질 강화와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대비 연구조사 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 오염총량관리 TOC 도입·추진 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TOC 저감 방안 마련</li> </ul>
9	동남권(부울경), 남해안권(전경부) 지역학 공동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학 연구사업'을 토대로 경남정신 확립 등 가시적 성과 도출 후 부산·울산광역시와 협의 등 검토</li> </ul>
10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직에 도민 추천 개방형 임용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형직위를 확대하는 것은 조직운영 측면과 시도 간 균형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li> </ul>

연번	위원회 제안사항	부서 검토의견
11	국립 남부 건축·디자인센터 구축	◦ 향후 타 시·도 사례 등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적으로 센터 설치에 대한 검토 필요
12	남해안 고속철 전담팀 운영	◦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에서 남부내륙 고속철도와 연계한 경남 발전 그랜드비전 수립 용역('19.4~'20.3)에 남해안 고속철 대비 경남 관광에 대한 종합적·장기적 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음
13	'경남 정책 시청자 수용프로그램' 지원 및 '완전히 새로운 경남' 미디어 센터 조성	◦ 미디어센터를 이용하는 도민이 도 주요정책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남의 특색있는 도정 홍보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협의하여 추진
14	서부청사 행복화원, 서부경남의 상징적 정원 혹은 남명학 연계 개념 정원 조성	◦ 기본계획과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 중장기적으로 행복화원 조성사업 추진
15	경남도청 내 심신안정센터 설치, 운영	◦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채용, 공간 마련 등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중장기 검토가 필요

## ■ 기 추진 중 : 4건

연번	위원회 제안사항	부서 검토의견
1	지역산업 위기대응 TF 신설	◦ 항공, 조선, 소재·부품·장비 등 경남의 주력산업의 위기 대응과 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협의회 기 구성, 상시 운영 중
2	농촌활동가 육성 및 발굴을 통한 경남형 농촌일자리 발굴	◦ 경상대 산학협력단 내 '경남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민·관·학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하여 농촌 현장활동가 육성, 농촌현장포럼 지원 등 일자리발굴을 위한 사업 추진 중
3	가야사 교육과정 도입	◦ 교육청에서 사회과목 보조자료로 지역역사 교과서(가야사 포함)를 발간하여 교육 중
4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 시행	◦ 중앙정부 주민참여3법(주민조례발안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제·개정 추진 중, 법령 제·개정 완료시 조례 제·개정 추진 계획

## ■ 미반영 : 2건

연번	위원회 제안사항	부서 검토의견
1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 품질검수단 서비스 시행	◦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의 성향 및 주거의 만족도에 따라 평당 건축비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평균적인 품질검수의 눈높이를 맞추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품질검수 제도 취지와 맞지 않음
2	공무원 52시간 근무제 적용	◦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름



#### 4 **도정자문위원회 신규제안과제 (2020. 6월)**

목표	전략	신규제안과제
목표1	전략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혁신 스마트(ABBC: AI-Big Data-Blockchain-Cloud) 인력양성센터 설치</li> <li>◦ 모바일 엣지데이터센터 건립</li> <li>◦ 항공우주아카데미(학,석,박사) 설립</li> </ul>
	전략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li> <li>◦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li> <li>◦ 공익형 수산직불제 촉진 사업</li> <li>◦ 농산물 꾸러미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꾸러미 취약계층 긴급지원</li> <li>- 농산물 꾸러미 사주기 캠페인 및 바우처 제공</li> <li>- 로컬푸드 직매장 온라인 주문 및 배송, 도내 조직화 방안과 물량확보</li> </ul> </li> </ul>
목표2	전략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주거복지센터 설립</li> <li>◦ 경남아동권리보장원 설립</li> <li>◦ 경상남도 보건당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 도민건강국 설치</li> <li>◦ 경남건강재단 설립</li> <li>◦ 경남정신사회재활센터 설립</li> </ul>
	전략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대응 경남 축제·전시·이벤트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li> <li>◦ 온라인 문화관광상품 비즈니스 플랫폼 개발</li> <li>◦ 서부경남 콘텐츠 지원센터 설립</li> <li>◦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문화영화제 개최</li> </ul>
	전략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남도 빈집뱅크 신설 및 운영</li> <li>◦ 소규모 공공건축물 간이설계공모 도입</li> <li>◦ 지역 커뮤니티시설의 임시주거 및 무더위쉼터 기능 강화</li> <li>◦ 건축문화 아카이브 관리·운영 고도화</li> <li>◦ 도민 체감 생활경관 관리사업 추진</li> </ul>
목표3	전략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의민주주의 제도 보완,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제도 실시</li> <li>◦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코로나19 등 효과적인 방역과 재난 대응을 위한 아파트공동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활동가 육성, 지원</li> </ul>
	전략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관리 및 평가 과정에 도민참여 확대를 위한 도민평가단(가칭) 운영</li> <li>◦ 공무원 ‘명장’, ‘달인’(행정 달인, 청렴달인, 소통달인 등) 등 제도 운영</li> </ul>



## 5 도정자문위원회 운영

### 위원회 개요

- 근거 :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14.4.3)
- 위원임기 : 2년 (2018. 11. 15. ~ 2020. 11. 14.), 연임가능
  - 단, 위원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 위원 잔여 임기
- 주요기능
  - 도정4개년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정책 제언
  - 주요 도정의 추진방향, 정책 건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자문 등

### 위원회 구성

- 구성 : 30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 50명 이내로 구성
  - (위 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운영·기획위원회 : 위원회 활동방향 설정, 보고서 내용 정리 등
- 분과위원회 : 4개분과(경제혁신, 민생, 문화복지, 사회혁신)
- 운영실적 : 45회(전체회의 4, 운영·기획위 19, 분과위 22) \* '20. 6월 현재
  - 2018년 : 3회(전체회의 1, 운영위 1, 분과위 1)
  - 2019년 : 34회(전체회의 2, 운영·기획위 12, 분과위 20)
  - 2020년 : 8회(전체회의 1, 운영·기획위 6, 분과위 1)
- ※ 기타 : 개별면담 25회(도지사 7, 행부 10, 경부 8), 시군 간담회 4회, 워크숍 6회

### 주요 활동내역

- 2018년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회 : '19. 1월
- 2019년 1/4분기 추진상황 점검 : '19. 4월
- 민선7기 1주년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회 : '19. 6월
  - 신규과제 제안 32건 ⇒ 도정4개년계획 정비
- 2019년 3/4분기 추진상황 점검 및 정비 : '19. 10월
  - 변경 2건 / 도정자문위 신규제안 9건 반영
- 2019년 4/4분기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회 : '20. 1월
  - 신규과제 제안 24건
- 코로나19 극복 긴급재난지원금 도민토론회 : '20. 4월

### 2020년 계획

- 도정4개년계획 추진상황 점검 : 분기별
- 도정4개년계획 성과 창출을 위한 워크숍 : 연중(전체 1회, 4개 분과별 2~3회)
- 도정4개년계획 정책개발 연구(경남연구원 위탁) : '20. 4월 ~ 8월

## ■ 위원 현황

위원장	위원	장
이은진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시원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덕철	경남대학교 명예교수	
경제혁신분과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분과장, 운영위원)
	김공회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영훈	경남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교수
	유남현	경남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기획위원)
	정석찬	동의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교수
	조영태	창원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김보배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전문위원)
	조주현	경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전문위원)
	지주형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전문위원)
	정승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전문위원)
	심상완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분과장, 운영위원)
민생분과	김남길	경상대학교 해양식품생명의학과 교수
	김훈규	사단법인 거창군농업회의소 사무국장
	박윤정	노무사(기획위원)
	윤동주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정미경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전문위원)
	유진상	창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분과장, 운영위원, 기획위원)
문화복지분과	김윤자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태영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기획위원)
	박명덕	전직 경상남도청 공무원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운영위원)
	박현건	경남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
	어석홍	창원대학교 토목환경화공융합공학부 교수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학과 교수
	김영석	경상대학교 사범대 일반사회학과 교수
	이영호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현준	경남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교수(전문위원)
	문현미	인제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전문위원)
	양진홍	인제대학교 헬스케어IT학과 교수(전문위원)
	정규식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전문위원)
	정필승	인제대학교 미래에너지공학과 교수(전문위원)
	이성기	인제대학교 명예특임교수(전문위원)
	이선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전문위원)
	최현기	경남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전문위원)
사회혁신분과	이한기	마산대학교 물리치료과 교수(분과장, 운영위원)
	강재규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운영위원)
	정원각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기획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
	이종호	경상대학교 지리교육학과 교수
	주기완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윤기	마산YMCA 사무총장
	장유미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전문위원)